

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금융위원회

2020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0.6.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27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8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0
1.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1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III. 세부 추진계획	18
전략목표 I	18
전략목표 II	52
전략목표 III	81
전략목표 IV	113
IV. 환류 등 관련계획	146
1. 이행상황 점검	14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49
3. 변화관리 계획	150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52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155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162

1. 그간의 정책성과

가. 금융안정 유지 및 잠재 위험요인 관리

◆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잠재 위험요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상시점검·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고한 금융안정 유지

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 유도

① 증가속도 관리, 소금융권 DSR 도입 등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 ('16년말)11.6 ('17년말)8.1 ('18년말)5.9 ('19.3Q)3.9

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사업자대출, 고가주택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규제 강화('19.10월, 12월)

②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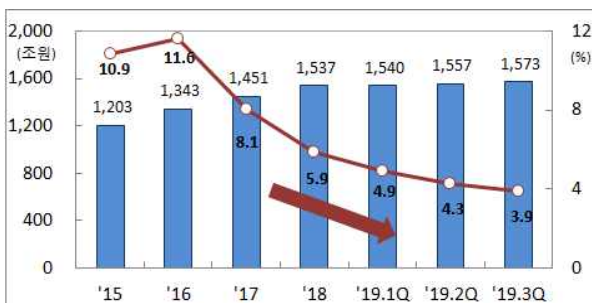
○ 부실채권(NPL) 시장의 민간중심으로 전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1.6조원) 등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③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

○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추진

* RP시장, 채권대차,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 마련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 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

시장형성 선도	회생기업 지원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최대 5조원)	③ DIP 금융 활성화 (직·간접지원 연 2,300억원)
② 유암코(2천억원) 및 캡코 (年 2천억원) 투자 확대	④ S&LB 등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연 2,000억원)

나.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

◆ 기업 여신심사 추진, 모험자본 확대, 정책금융 공급 추진 결과, 기술력·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 공급

①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 ①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新 예대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이 747조원을 상회
- ②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 동산금융 공동 DB 구축('19.8월) 등 담보관행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동산담보대출 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②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구조혁신을 추진

- ① 성장지원펀드를 조성(3년간 8조원)하고 대형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등 대상 모험자본 공급 확대('13말 0.07조원→'19.3말 1조원)
- ②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에 '혁신성'을 강화^① 하고, 상장절차도 간소화^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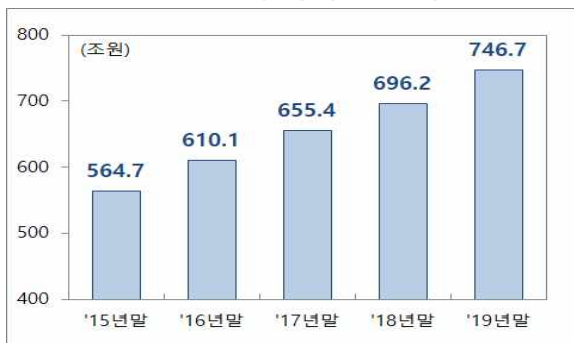
① 주력 기술 및 사업의 독창성·확장성, 사업화·R&D 역량 등을 심사지표로 활용

② 외부 기술평가 등급이 우수한 경우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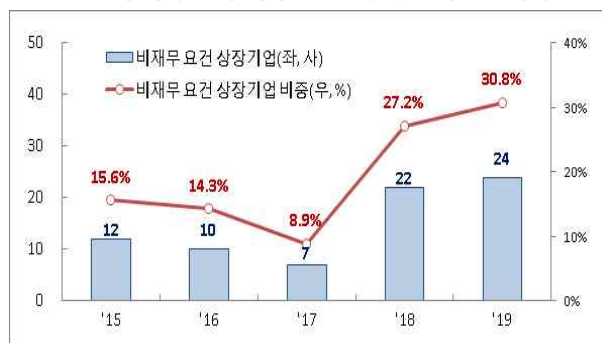
③ 정책금융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재편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19.11월 기준 5.2조원) 등을 지원

< 은행권 중기대출 잔액 >



< 코스닥시장 비재무요건상장 기업 비중 >



다.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

◆ 금융권 전반에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빅데이터 등 금융 분야 新산업의 활성화 유도

①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추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유도

- ❶ 혁신 ICT기업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18.10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예비인가, 1개사)
- ❷ 6년 만에 보험사를 신규허가(1개사, 온라인특화)하였으며, 10년간 신규 인가가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도 신규인가(3개사)

② 핀테크 산업발전·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구축

- ❶ 혁신적인 新금융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19.4월)
- ❷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방식을 도입하는 P2P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19.10월)
- ❸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안, '20.1월 국회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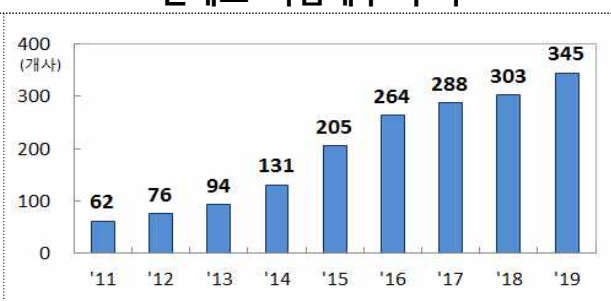
③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❶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19.4월~)하면서 현재까지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
- ❷ 오픈뱅킹 출범('19.12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19.6월~) 등을 통해 금융분야 新산업 활성화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 >



< 핀테크 기업체수 추이 >



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 서민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취약 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고 포용금융을 확대

1 이자·수수료 등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① 법정 최고금리 인하^①(27.9%→2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②을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①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부담 1.1조원 경감 추정

② 약 27만명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연간 2천억원, 1인당 75만원)

② 우대가맹점 확대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1.4조원 추정) 완화*

*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 : (17.1월) 77 → (17.7월) 84 → (19.1월) 96

2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강화

①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햇살론¹⁷ 신규 공급, 중금리 대출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지속 경감

* 서민금융 공급액 ('08년 이후 누계) : ('15)22.2조원 → ('19년)49.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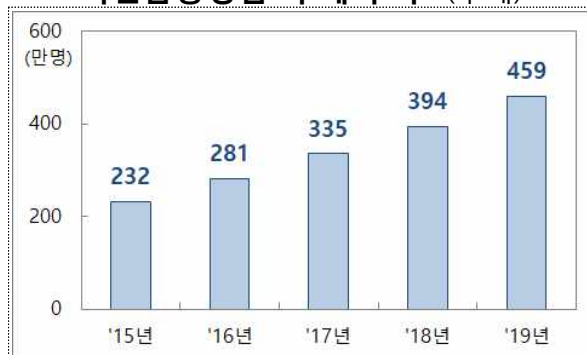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채무조정 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

* '17.7월 ~ '19.12월까지 총 40조원(394만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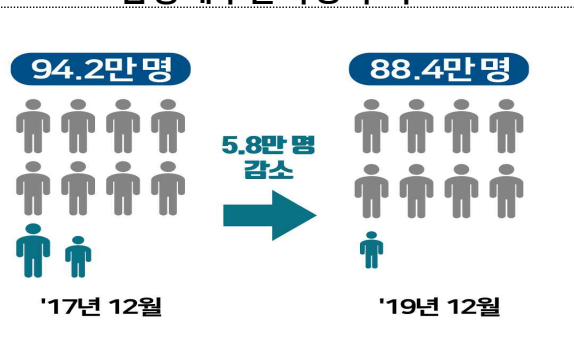
3 금융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고령층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 등

<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수 (누계) >



<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



◇ '20년 금융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일반 국민(510명) 및 전문가(21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갤럽, '20.1월)

1.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

□ (인지도) 정부의 혁신금융 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전문가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혁신금융과제 10개 중 4개 이상 인지 : 일반인 30.4% < 전문가 92.9%

< 설문 대상 혁신금융과제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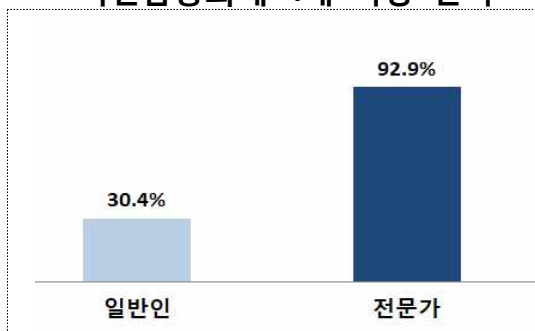
- | | |
|------------------|----------------|
| ■ 동산금융·일괄담보제도 | ■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
| ■ 신예대출 등 자본규제 개편 | ■ 성장지원펀드 |
| ■ 기술금융 | ■ 코스닥시장 상장활성화 |
| ■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 | ■ 오픈뱅킹 |
| ■ 빅데이터 | ■ 인터넷전문은행 |

□ (혁신금융 노력 및 변화) 일반 국민은 전문가에 비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노력 및 금융회사의 변화에 대해 낮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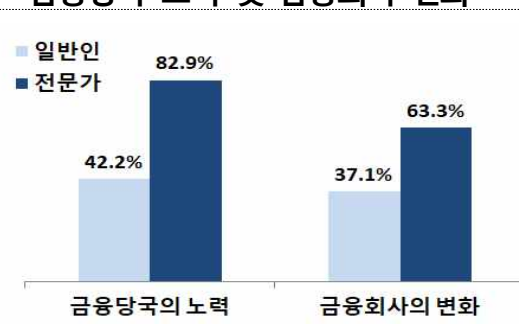
*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매우) 노력중 : 일반인 42.2% < 전문가 82.9%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에 따라 (매우) 변화중 : 일반인 37.1% < 전문가 63.3%

○ 일반 국민, 전문가 모두 당국의 제도·인프라 개선 노력에 비해 일선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인식

< 혁신금융과제 4개 이상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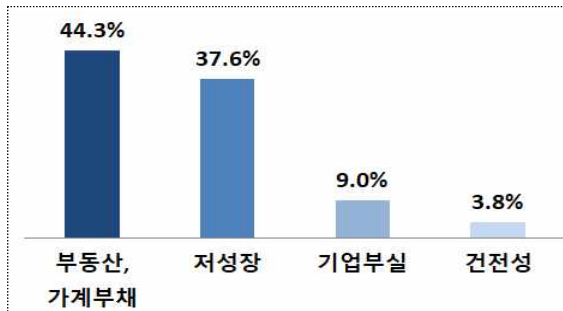
< 금융당국 노력 및 금융회사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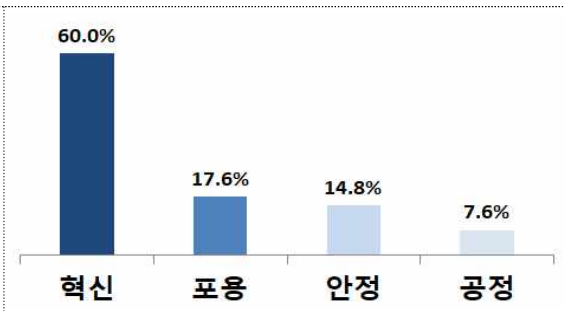
2. 2020년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 (추진여건) '20년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자금쏠림·가계부채(44.3%), 저성장(37.6%) 등을 지적
- (중점목표) '20년 중점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금융(60.0%), 포용금융(17.6%), 금융안정(14.8%), 공정성(7.6%) 순으로 응답

< '20년 국내 금융시장 위험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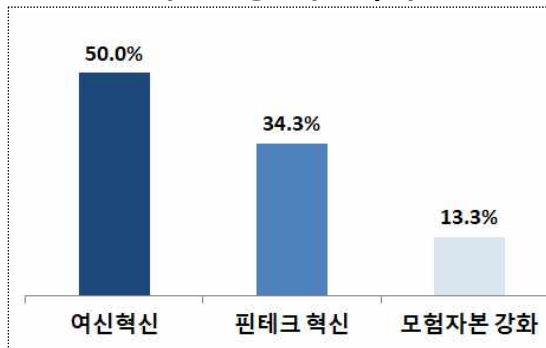


< '20년 중점 금융정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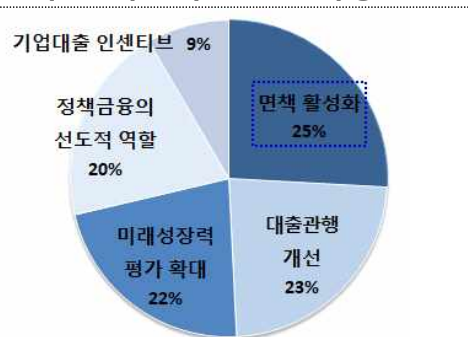


- (목표별 핵심과제) 중점목표별로 기업 여신혁신(혁신), 서민 지원(포용), 가계부채 관리(안정)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
- (혁신금융) 핵심과제로 기업 여신혁신(50.0%) → 핀테크 혁신(34.3%) → 모험자본 활성화(13.3%) 순으로 제시
- '기업 여신혁신' 과제에서는 금융회사 면책 활성화(25%), 대출관행 개선(23%)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지적

< 혁신금융 핵심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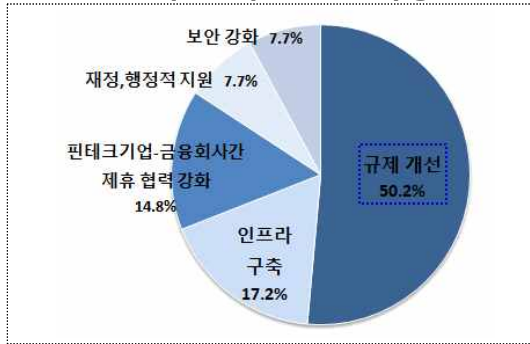


< 기업 여신혁신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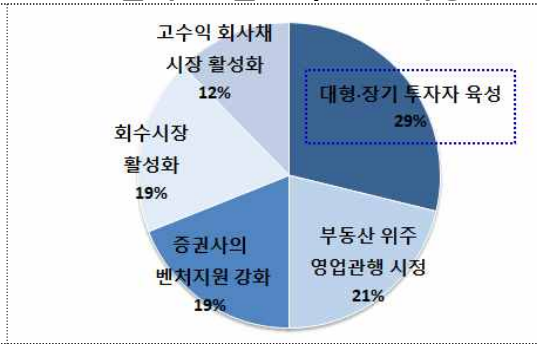


- '핀테크 혁신'에서는 규제 개선(51%), '모험자본 활성화'는 대형·장기투자자 육성(29%)을 가장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

< 핀테크 혁신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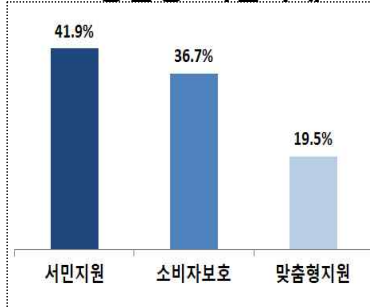
< 모험자본 활성화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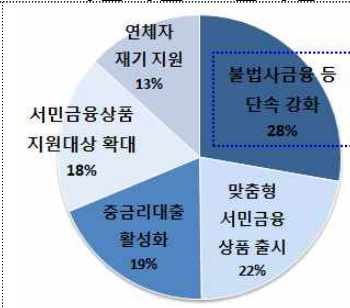
- **(포용금융)** 핵심과제로 서민 지원·취약계층 보호(41.9%) → 금융소비자 보호(36.7%) → 계층별 맞춤형 지원(19.5%) 제시

- ‘서민 지원’은 불법사금융 등 단속 강화(28%),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품설명서 개선(25%)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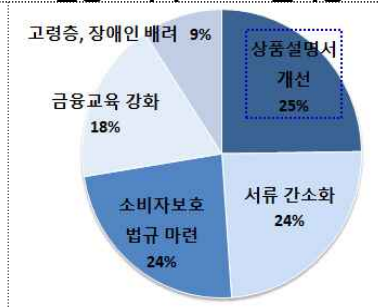
< 포용금융 핵심과제 >



< 서민지원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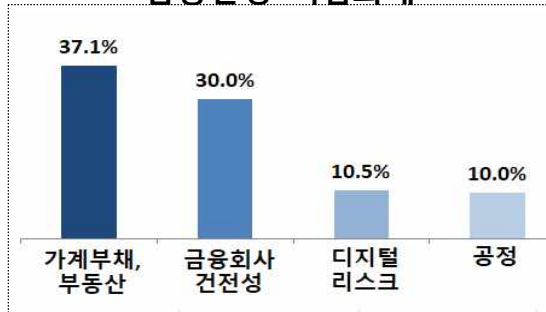
< 금융소비자보호 보완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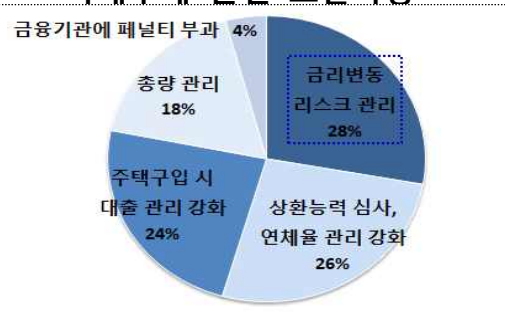
- **(금융안정)** 핵심과제로 가계부채 관리(37.1%)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30.0%) → 디지털 리스크 관리(10.5%)를 제시

- ‘가계부채·부동산 금융 관리’에서는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28%)를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 금융안정 핵심과제 >



< 가계부채 관련 보완사항 >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혁신금융]** 그간의 혁신금융 추진 결과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중개 전반에 걸쳐 혁신금융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

-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위주 영업, 담보·보증 의존 관행이 여전하며 기업심사역량 제고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
 -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보증이 충분한 기업에 치중하는 사례가 여전히 곳곳에 잔존
- 일부 모험자본은 장기 투자, 벤처·혁신 투자 등 본연의 역할 보다는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 등 고수익 추구에 집중

▶ (벤처기업) "미래사업성 평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여전히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등 보수적인 여신심사 관행이 지속"

➡ 미래성장성 중심의 기업여신체계 확립, 모험자본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혁신금융 강화

◆ **[금융부문 혁신]** 진입규제 완화, 혁신서비스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나, 금융산업 전반으로 변화를 확산시킬 필요

- 그동안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고 있으나, 공급자 위주의 산업구조하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행태가 여전하다는 평가
- ➡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혜택 확대, 혁신적인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진입규제 개선, 경쟁·혁신 유도 필요
- 핀테크 법제 마련,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였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주도형 금융제도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
- ➡ 핀테크 경쟁력 제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지원방안 마련 등 추진

◆ **[포용금융]** 서민금융 지원성과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의 진전이 있으나, 금융 포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

-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 채무조정 관련 금융제도·관행이 채무자의 재기지원보다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 (금융소비자) "파생결합증권 등 복잡한 상품이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
- ▶ (고령층 이용자) "금융상품 이용이 전반적으로 온라인화·자동화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익숙치 않은 경우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음"

➡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제도, 관행, 재원조달, 교육 전반에 걸쳐 포용성 지속 강화

◆ **[시장안정]** 대내외 불안요인이 실물·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요인으로 실물·금융부문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상존
- 가계부채, 기업부문 리스크 등 알려진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 펀드 유동성리스크, 부동산PF 익스포져 쏠림, 금융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리스크 등 신규 위험요인도 부상
- ➡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한 실물·금융부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한 관리 등 대응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및 기구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구성(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

□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부서별 주요기능 >

구 분	주요 기능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내·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외국환건전성 감독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
구조개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
금융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관행 개선
자본시장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 ·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
자본시장조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분류 ·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금융정보분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그룹감독 정책, 건전성 감독 등 ·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원

□ 정원 : 314명 ('20. 4월말 현재)

구 분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계
정원 합계	2	304	8	314
본부	2	243	-	245
금융정보분석원	-	61	8	69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804	8,864 84.5%	4,930 △44.4%	3,538 △28.2%	1,768 △50.0%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87,331	328,722	369,571	356,900	403,048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248	281 13.3%	300 6.8%	321 7.0%	344 7.2%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72	77 6.9%	79 2.6%	81 2.5%	84 3.7%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4,484	8,507 89.7%	4,551 △46.5%	3,135 △31.1%	1,341 △57.2%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788	8,732 82.4%	4,770 △45.4%	3,533 △25.9%	1,768 △50.0%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5,788	29,732 15.3%	67,770 127.9%	70,533 4.1%	73,768 4.6%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788	6,732 40.6%	4,770 △29.1%	3,533 △25.9%	1,768 △50.0%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5,788	27,732 7.5%	67,770 144.4%	70,533 4.1%	73,768 4.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2,000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	2,000	-	-	-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5	132 780.0%	160 21.2%	5 △96.9%	0 △100.0%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61,542	298,990 14.3%	301,802 0.9%	286,367 △5.1%	329,280 15.0%
【공적자금상환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5	132 780.0%	160 21.2%	5 △96.9%	0 △100.0%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84,578	104,313 23.3%	85,471 △18.1%	92,116 7.8%	107,897 17.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708	680 △4.0%	701 3.1%	645 △8.0%	555 △14.0%
【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77,544	76,427 △1.4%	87,256 14.2%	87,200 △0.1%	84,961 △2.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5,695	11,307 △28.0%	23,468 107.6%	10,127 △56.8%	14,254 40.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56,582	65,760 16.2%	55,578 △15.5%	61,454 10.6%	72,525 18.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6,436	40,503 53.2%	49,327 21.8%	34,827 △29.4%	49,090 41.0%

* '19년은 실적, '20년은 예산, '21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을 명기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임무) 이를 위해 “①금융산업의 선진화, ②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③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④금융소비자 보호”를 4대 임무로 설정
 - (비전) 정책비전을 “신뢰받는 금융,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추진
 - 전략목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 전략목표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 III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전략목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선정
 -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2개의 성과목표 하에 40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 추진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12개 성과목표에 대한 14개의 성과지표와 40개 관리과제에 대한 67개의 성과지표를 각각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12	14	40	6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차단	업무 1-가, 국정 21-1
	② 은행 자본규제 개선	업무 1-가
	③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국정 21-6
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업무 7-가
	②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업무 7-다
	③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업무 7-라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① 혁신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강화	업무 1-라
	②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 1-라, 비상경제대책회의
	③ 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업무 1-나
	④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업무 3-나, 국정 22-5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 3-나, 국정 22-5
	③ 데이터경제 활성화	업무 3-나, 국정 22-5
	④ 디지털 금융시장·인프라 고도화	업무 3-나, 국정 22-5
2.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업무 3-가, 국정 22-1
	②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	업무 3-가
	③ 신탁제도 전면 개편	업무 3-가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업무 1-마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확대	국정 22-3
	③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	규제혁신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Ⅲ.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서민금융 안전망을 개선한다.		
	①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공급 확대	업무 4-가, 국정 29-3
	②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강화	업무 4-나, 국정 29-2
	③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업무 4-다, 국정 21-3
	④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4차) 등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업무 5-가, 국정 21-5, 22-1
	②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업무 5-나
	③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	업무 5-다
	④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업무 8-라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국정 29-4
	② 코로나19 극복위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
	③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업무 6-나,다
	④ 무주택·실수요 차주 주거부담 경감	업무 6-라
Ⅳ.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	업무 8-나, 국정 24-4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국정 22-4
2.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	업무 8-가
	②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	업무 8-나, 국정 23-4
	③ 대부업 감독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업무 8-다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량강화	업무 2-가
	②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	업무 2-나
	③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업무 2-다, 국정 29-1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기 본 방 향

- ◇ 가계부채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안정 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 기반을 확립하고,
 -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자금이 혁신적 기업·주력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공급확대·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 가계부채 관리, 금융시장 안정 등은 다양한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나, 관련 동향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안정 달성노력 지속 필요
 - 동시에 코로나사태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10	2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①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차단	DSR 점검(횟수) 예대출 규제 변경
	② 은행 자본규제 개선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③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민간은행 유한책임대출 도입 목표치 부여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 대출 공급액(누적)
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①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공통)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공통) 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②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도입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RRP 도입을 위한 금산 법 개정안 발의
	③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 공급
	① 혁신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강화	국가대표 혁신기업 지원체계 구축 성장지원펀드 결성 금액
	②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 주력산업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
	③ 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상거래신용지수연계보증 동산담보회수지원
	④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 금융시장 안정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전략목표1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주요내용

- 가계부채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금융안정 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기반을 확립하고,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1,203.1조원	1,342.5조원	1,450.8조원	1,536.7조원	1,600.1조원	1,995.9조원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한국은행(분기별 가계신용)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I -1.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5.9%	4.1%	5.0%	4.8%	4.5%
I -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	15회	15회	15회	15회
I -3.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공급 (조원)	27.0	31.5	31.0	-*	-*

* 향후 계획은 예산배정, 공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정짓기 곤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 ☐ 가계부채는 전세자금대출, 신용판매(신용카드 사용액) 등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 국내외 금융시장 역시 대외적 경제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전적 통제가 곤란한 측면
- ☐ 한편,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할 필요

<갈등관리>

- ☐ 가계부채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 및 갈등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 *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금융위원장 주재, 금감원·금융업권 등)
 -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차관 주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 가계부채 관리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재부 차관 주재, 국토부, 금융위 등)
-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는 기업의 재무개선을 넘어 산업·고용 측면 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상황 발생 가능
 -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대규모·기간산업의 경우 범정부 협의체(예: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정할 계획

(4) 기타

- ☐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악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시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1) 주요 내용

□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통한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적 관리

- 소금융권 DSR 도입 등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체계 구축으로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통해 금융권 자금공급을 가계에서 벤처·중소기업 등 생산·혁신적 부문으로 이동(Shift) 촉진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여 대내외 충격시 취약 계층 보호

*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의 가치로 한정하는 대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8.1%	5.9%	4.1%	5.0%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한국은행(분기별 가계신용)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 -1. 연도말 가계부채 증가율	4.1%	5.0%	4.8%	4.5%	4.3%	4.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차단(I -1-①)

□ 추진배경 (목적)

○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가계부채 증가율(한은, %) : ('16)11.6 ('17)8.1 ('18)5.9 ('19)4.1

-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커서*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관리 필요

* 가계부채 / GDP : (한국, '18년) 94.6% (OECD평균, '17년) 65.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18.10월 은행, '19.6월 제2금융권 시행)

-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여건 조성

○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상향조정하여 주택시장 불안 방지**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예대출 규제 시행	'20.1월	
2/4분기	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	'20.5월	
	예대출 규제 추가 변경	'20.5월	
3/4분기	예대출 규제 이행상황 점검	'20.9월	
4/4분기	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	'2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 참여자
- (이해관계집단) 기존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여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는 금융회사, 예대율 적용을 받는 은행

☐ 기대효과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착근시킴으로써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 정착
- 자금이 자영업자 등 보다 필요한 부문에 흘러들어가게끔 유도하는 한편,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유입은 사전에 차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DSR 점검(횟수)	-	-	-	4회	-	분기별 DSR 분석횟수	분석 보고서
예대율 규제 변경	-	개정	-	개정	-	개정여부	개정규정 시행

② 은행 자본규제 개선(I -1-②)

□ 추진배경

-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여, 가계부문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할 필요
- 특히,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수축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 자산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 추진	'20.6월	코로나 19로 인한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시점을 결정할 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로 인한 혜택을 누릴 금융소비자 및 시장 참여자
- (이해관계자) 가계부문 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적립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등

☐ 기대효과

- 가계신용 변동에 적시 대응이 가능해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	-	-	개정	-	-	-

③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I-1-③)

□ 추진배경 (목적)

-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를 통해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호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전반에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한 데 이어, 민간은행에도 유한책임대출 확산을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목표* 부여('20.6월)

* 민간은행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혜택 부여

-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 확대(연중)

* '19년말 누적공급액 6.0조원에서 '20년말 누적공급액 11.0조원 이상으로 확대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한 목표 부여	'20.6월	
4/4분기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 지속 (누적 11.0조원 공급 달성)	'20.12월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한정하여 서민·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축소

- (이해관계집단) 유한책임대출을 도입 및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
 - 주택가치를 넘는 대출잔액 추심 곤란 등으로 도입에 소극적일 가능성 → 주신보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를 통한 취급유인 제공

□ 기대효과

-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부채 총량증가를 억제

*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확보 및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민간은행 유한책임대출 도입 목표치 부여				목표 도입	은행권의 자율제시인(총 모기지의 1%)과 정책모기지 실적을 근거로 설정	금융감독원 자료전송시스템	금융감독원 집계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누적)		1.7	6.0	11.0	전년대비 확대된 금액을 목표로 제시	주금공 업무통계(매월 집계)	주금공 업무통계

성과목표 I-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잠재리스크 누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 강화
- ☐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 경제 내 잠재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개별기업 부실의 선제 차단·확산 방지 및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	-	15회	15회	대표적인 선제적 점검조치인 (1) EWS(월1회*12개월)와 (2)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 평가(총 3회)의 목표치를 합산하여 산출	(1)EWS모니터링 실시 횟수 + (2)취약 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평가 횟수	(1)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결과 취합 (2)주채권은행 재무 구조 평가 및 신용 위험평가 실시 결과 취합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15	15	15	15	15	15

(3) 세부 추진계획

-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금융시장 변동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도입,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 마련 등 금융산업 건전성 제도 개선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는 기업의 재무개선을 넘어 산업·고용 측면까지 포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상황 발생 가능
 -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대규모·기간산업의 경우 범정부 협의체(예: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정할 계획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I -2-①)

□ 추진배경 (목적)

-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유가 급락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
 - 국내 금융시장도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영향 정도, 대외 불확실성 요인 향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 RP 시장에서 익일물(만기 1영업일) 위주 거래(약 94%) 관행이 지속되며 대량 차환 부담 등 시장위험 상존
-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 하위법 제정 및 시행(11.27일)
 - 지표법이 EU로부터 동등성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 지속
- * 한국의 법·감독체계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승인받는 것으로, 未승인시 EU금융회사의 한국 금융거래지표(CD)를 활용한 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금융시장 변동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주식, 환율, 채권 등 금융시장 주요 지표 동향 밀착 점검
 - 잠재,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분야 위험요인 파악 및 선제적 대응 환경 조성

* 금융유관기관 합동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금융리스크 점검회의 등

- RP 시장에서 기일물 거래를 유도하고,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 도입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

* RP 매도액의 일정비율(예: 익일물 20%, 2~3일 10%, 4~6일 5%)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

- 차질 없는 지표법 시행을 위하여 법 시행일('20.11.27일) 전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 완료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월	
	지표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월	
2/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공포	'20.6월	
	지표법 시행령 규제 심사 완료	'20.6월	
3/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지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7월	
4/4분기	거금회의, 합동점검반 등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	분기중 1회	필요시 개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	매월 1회	
	지표법 시행규칙 공포	'2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확대를 최소화
- (이해관계집단)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기관간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불안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 마련

☐ 기대효과

- 리스크 요인 및 파급효과를 정밀분석하고, 모니터링 강화, 법·제도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확고한 시장안정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공통)	거금 13회, 대장점 8회	거금 5회, 대장점 1회, 금상점 2회		관련 회의 10회	'17~'19년 개최실적, 최근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산정 * 거시경제금융회의/금융상황점검 회의 등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개최되는 회의로서 구체적인 목표 산출에 한계	개최 실적	보도자료 등 점검회의 개최 실적 증빙 자료 등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공통)	12회	12회	12회	12회	월 1회 실시 * 12개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결과
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신규	신규	3회	4회	분기별 1회씩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모여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	개최 실적	보도자료 등 점검회의 개최 실적 증빙 자료 등

②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I -2-②)

□ 추진배경

-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지자체 금고 등 입찰 유치 과정에서의 은행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보험부문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23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대형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고,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지자체 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의 은행간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금감원 행정지도 도입)
 - * 출연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보수적으로 분석하여 은행과 일반이용자에 부담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출연토록 규정
- ② 보험부채(보험금 지급 대비 적립하는 금액) 평가방식 변화(원가→시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 마련
 - *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중 일정 부분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여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로,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를 재보험사와 나누어 부담
- ③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제도(RBC)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진행
- ④ 대형은행 등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하고, 부실 시 질서정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상화·정리계획(RRP**) 사전 마련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Recovery Plan &Resolution Plan

〈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동재보험 도입방안 마련 및 발표	'20.1월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 도입	'20.3월	
2/4분기	공동재보험 도입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4월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20.6월	
3/4분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영향평가 실시	'20.9월~	
4/4분기	금융산업구조개선법(RRP 도입) 개정안 국회 제출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관리 강화에 따라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금융소비자

- * ① 지자체 금고 등 입찰과정에서 출연금 비용을 절약하게 될 수 있는 은행
 ②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경으로 인해 건전성 취약이 예상되었던 보험회사
 ③ RRP 작성을 통해 건전경영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시 복원력을 제고할 SIFI 등

- (이해관계집단)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는 제도 개선에 따라 시스템 개선 등 의무를 요구받게 되는 금융회사 등

□ 기대효과

- 건전성 제도 개선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한 제도 마련을 통한 국제 신인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도입	신규	신규	신규	도입	은행과 이용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	행정지도 도입	금감원 홈페이지 게재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신규	신규	신규	2회	분기 또는 반기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회의개최 및 규정개정	금융위 보도자료 및 고시 확인
RRP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법 개정안 발의	신규	신규	신규	도입	21대 국회 신규 구성을 감안하여 연내 개정안 국회제출 추진	법률안 발의	국회 홈페이지

③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I -2-③)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내 잠재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개별기업 부실의 선제 차단 및 확산 방지 필요
- 아울러, 기업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부문 신용위험 모니터링 실시 및 구조조정과의 연계 강화
 - (대기업그룹 관리) 금융권 여신이 많은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대기업그룹의 부실위험에 사전 대응
 - *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
 - (개별기업 관리) 주채권은행이 개별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선택에 따라 워크아웃·회생절차 등 추진
 - * 코로나19는 기업의 경영실패가 아닌 불가항력적 외생변수인 만큼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지 이를 충분히 감안할 예정
-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등 추진
 - 1조원 추가 확대, 부채투자 전용펀드 조성, 프로젝트펀드 확대 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평가 실시	'20.6월	
3/4분기	부채투자 전용펀드 조성	'20.7~8월	
4/4분기	개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실시	'20.7~11월	12월 결과발표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구조조정 대상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채권은행 건전성 제고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지역사회 및 경제 전반의 침체를 최소화

□ 기대효과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시장안정화에 기여
-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 시장의 모험자본이 구조조정 시장에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산업은행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일반회계	-	7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연3회	대기업그룹, 개별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연 3회 별도의 평가를 통해 취약계열 및 기업을 선정하여 관리	평가 실시 결과 및 취약계열, 기업 선정여부 확인	주채권은행 재무구조 평가 및 신용위험평가 실시 결과 수집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	신규 도입	확대 및 전문화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업맞춤형 지원을 위한 투자 시행	규모 확대 및 전용펀드 조성	운용사(성장금융)로부터 결과 수집

성과목표 I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자금이 혁신적 기업·주력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공급 확대·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추진
- (혁신부문 지원 강화) 정책금융·민간 자금 등이 혁신적인 부문에 집중 공급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 (주력산업 지원)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 적극 지원
- (여신시스템 개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성·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 마련

(2) 성과지표

(단위 : 조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 공급	21.0	27.0	31.5	31.0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20년도 업무계획	각 정책금융기관 금융공급 실적 집계	각 기관별 제출 자료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 -3.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 공급	31.5	31.0	-	-	-	-

(3) 세부 추진계획

- ☐ 관계부처 협업·정책금융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혁신부문·주력산업 등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혁신부문 지원 강화)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1,000 기업 집중지원, 성장지원펀드 등 혁신부문 자금공급 확대
 - (주력산업 지원) P-CBO 지원 확대 등으로 주력산업 자금애로 해소, 소부장 펀드 조성·운영 등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지원
 - (여신시스템 개선) 동산금융 확산을 위해 회수지원기구 설치,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금융(보증)상품 공급 등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 기업 자금애로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시장 불안·기업 유동성 애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 코로나사태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혁신부문 지원전략 등도 세밀히 구축해 나갈 필요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6)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혁신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강화(I-3-①)

□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활력·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성 있는 부문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필요
- 그러나, 종전의 금융지원체계는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혁신적 기업을 적극 선별·지원하는데 한계
 - 관계부처(산업부·중기부 등) 협업을 통해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필요
- 또한, 민간 자금이 혁신부문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
 - 재정·정책금융 자금 등을 바탕으로 혁신부문에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펀드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국가대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구축

- 산업부문별 특성과 산업내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을 선정
-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
- 잠재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지원

②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 및 정책 금융기관 자금 및 민간자금을 통해 충분한 모험자본 조성
- 펀드의 결성·운영은 정부 역할보다는 민간의 창의성 적극 활용 (민간이 자율제안·주도하는 출자방식 등 활용)
- 혁신성을 갖춘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집행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혁신기업 국가대표 운영방안 등 협의	6월	중기부, 산업부, 정책금융기관 등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4월	
3/4분기	부처별 혁신기업 선정·추천	9월	
	성장지원펀드 펀드 결성	계속	
4/4분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 실시	계속	
	성장지원펀드 펀드 결성 완료	연내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벤처, 유망산업, 핀테크 등 혁신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 (이해관계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 기대효과

-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 높은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유망기업 육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대
- 산업부문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기대
- 재정지원과 정책금융 자금을 매중물로 민간 자금이 혁신부문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혁신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강화(I-3-①)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2414-309)	일반회계	1,000	5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조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국가대표 혁신기업 지원체계 구축				지원체계 구축	'20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위 및 관계기관 발표자료
성장지원펀드 결성 금액		2.94	2.75	2.5		관계기관 등 제출 자료

②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I -3-②)

□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안정적 고용 유지 등을 위해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회복 필요
-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필요
-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 금융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
 - 단기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 주력산업·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주력산업 P-CBO 지원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주력업종(자동차, 조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주력산업 P-CBO」 지원(20년중 1.5조원)
 - (지원대상) 주력업종 등 중소·중견기업
 - (지원방식)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회사채 발행 지원
(발행된 회사채는 신용보강을 거쳐 유동화 → 시장 매각)

②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지원

- 재정(2,000억원), 산은(200억원)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 출자(1,800억원)를 받아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조성
-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집행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주력산업 P-CBO 운영계획 수립	1월	
	소부장 전용펀드 운용사 선정	4월	
2/4분기	주력산업 P-CBO 발행 지원	지속	
	소부장 전용펀드 결성	지속	
3/4분기	주력산업 P-CBO 발행 지원	지속	
	소부장 전용펀드 결성 완료	지속	
4/4분기	주력산업 P-CBO 발행 지원	지속	
	소부장 전용펀드 투자 실시	지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조선,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영위기업
- (이해관계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 기대효과

- 장기적 안정 자금 운용 등에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주력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자체기술력 및 공급안정성 확보 유도 및 소부장 산업자체의 경쟁력 제고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소·부·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1-3-②)				
소재·부품·장비 전용 혁신모험펀드 조성	본예산	-	2,000	
주력산업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본예산	5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조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	-	-	-	0.4	금융위 '20년 출자계획에 따른 지원목표	펀드 조성액	산업은행 제출 자료
주력산업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	-	-	-	1.5	본예산 및 추경에 따른 지원목표	회사채발행지원 금액	신용보증기금 제출 자료

③ 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I-3-③)

□ 추진배경

-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회사 대출 시스템으로 인해, 담보력이 낮은 창업·중소기업 등은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움
-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부동산에 비해 회수가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활용하기 꺼리는 실정
 -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는 공적 기구를 설치하여 금융회사의 동산담보 취급 유인을 제고할 필요
- 또한, 금융거래 정보 위주로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져, 지급결제 등 상거래에서 쌓인 긍정적인 정보는 기업의 금융이용에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
 -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판 paydex) 개발 등을 통해 상거래 정보가 기업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

-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는 금융회사가 동산담보대출 취급시 관리·회수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 대출에 대한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 동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해당 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여 관리·처분을 지원

②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판 paydex) 도입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하여 보증심사 등에 활용
- 「상거래 신용지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동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 등을 출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	3월	
	상거래신용지수 개발	3월	
2/4분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은행권 부실채권 매입 등)	계속	
	상거래신용지수연계보증 개발	6월	
3/4분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은행권 부실채권 매입 등)	계속	
	상거래신용지수연계보증 출시	7월	
4/4분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은행권 부실채권 매입 등)	계속	
	상거래신용지수연계보증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동산담보 보유 중소기업, 동산·IP·기업활동정보(지급결제, 고용 등) 보유 기업
- (이해관계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 기대효과

- 금융회사의 동산담보 회수·관리 부담 완화를 통해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 → 창업·중소기업 등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긍정적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조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상거래신용지수연계보증	-	-	-	도입	신규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및 관계기관 발표자료	관계기관 등 제출 자료
동산담보회수지원	-	-	-	도입	신규사업 도입	금융위 및 관계기관 발표자료	관계기관 등 제출 자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I-3-④)

□ 추진배경 (목적)

-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둔화가 기업매출 감소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이어지면서 긴급한 금융대응의 필요성 증대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애로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

* 비상경제회의(1차: 3.19일, 2차: 3.24일, 5차: 4.22일) 등을 통해 발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초저금리 대출*, 특례·전액보증**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시
 - *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중은행을 통해 1.5% 금리 대출 공급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급
-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공급 확대*
 - * (대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보증)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 (금융시장 안정 지원)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 조성, 코로나 대응 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산은) 등 실시
 - 또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증안펀드를 조성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한은, 증권금융) 실시
- (고용안정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4/4분기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 지속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경영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 (이해관계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 기대효과

- 코로나 피해 기업의 자금난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산업금융지원(I -1-재정(1))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추경예산)	-	4,021.75
산업금융지원(I -1-재정(2))				
	기업은행 출자(2415) ▪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304)	일반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	2,000	5,910

* 1차 추경관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재정사업 내역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조 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지원	-	-	-	66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금융위 및 관계 기관발표 자료	관계기관 등 제출자료
금융시장 안정 지원	-	-	-	73.5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금융위 및 관계 기관발표 자료	관계기관 등 제출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	-	-	40.0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 (5차 비경 발표)	금융위 및 관계 기관발표 자료	관계기관 등 제출자료

전략목표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혁신도전자 출현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각 금융업권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4	10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융업권 총자산
II-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부스 개수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③ 데이터경제 활성화	신규 데이터 산업에 허가 받은 기관 수
	④ 디지털 금융시장·인프라 고도화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 마련
II-2.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금액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보험업경쟁도 평가
	②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③ 신탁제도 전면 개편	신탁업 전면 개편안 발표
II-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개정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정도
	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개정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확대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정도
	③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	법령 규제정비 건수

(1) 주요내용

- 금융산업에 경쟁을 통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유도 하도록 스펀라이센스, 임시허가 등을 도입
-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실시
- **(임시허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20.12월~)
 -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이 입증되었으나,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
- **(핀테크 육성체계 강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금·예산·해외진출 등 쏠분야에 지원기반 대폭 확충
 -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핀테크 혁신펀드」('20년 825억원 →4년간 3,000억원)를 통해 자금지원
- ※ 핀테크 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 및 조직 강화
- **(면책제도)**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금융업권 총자산 (조원)	3,789	4,068	4,299	4,598	4,960	6,420	최근 5년간 금융업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 총자산 증가액(평균 292조원)을 고려하여 연간 292조원의 증가액을 설정('24년 6,420조원으로 목표설정)	24년말 금융업권 총자산 실적을 측정	각 회사 및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 확인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Ⅱ-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	77	40	-	-
Ⅱ-2.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금액(억원)		-	6,530	7,000	-	-
Ⅱ-3.	「금융기관점사및제재규정」개정	-	-	개정	-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점수)	80	90	100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금융분야 경쟁과 혁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존
-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 참가자 확대에 따른 과도한 경쟁 및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 ☐ **(갈등관리계획)** 경쟁도 평가 결과 등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고려하여 관리과제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혁신기반 강화)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
 -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속 운영을 통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의 출현 지원
 - (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의 기틀 마련
 - (디지털금융 고도화) 디지털금융 전반의 고도화와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안정 도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신규	신규	77	40	'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목표 지정건수 설정 - 지정 개수뿐만 아니라 혁신금융 서비스의 질적 요소 고려 예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보도자료 등

(3) 세부 추진계획

- 관련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노력 지속
 - (혁신기반 강화)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개최(5월), 핀테크 혁신펀드 운용(연중), 핀테크지원센터 역량 강화(하반기) 등
 - (샌드박스) 샌드박스 제도 지속 운영(연중) 및 제도보완 수요를 반영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5월)
 - (데이터경제 활성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8월), 데이터 기반 신규 산업 허가(하반기) 등
 - (디지털금융 고도화) 디지털금융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12월)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인해 박람회, 핀테크 행사, 해외진출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거나 타국 방문이 필요한 일정은 차질이 생길 가능성
 -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6)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II-1-①)

□ 추진배경 (목적)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신산업 창출·異種산업간 융합 등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오픈뱅킹, 규제개선 등

- 핀테크 산업의 확대와 함께 핀테크 업체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도 국내 핀테크 활성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19년 우리나라 핀테크 도입지수(67%)가 '17년(32%)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여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7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 (Ernst&Young)

- 다만,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국 대비 늦은 시작, 협소한 시장규모 등으로 인해 글로벌 수준의 혁신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국내 핀테크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육·투자)**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를 확대하고, 「핀테크 혁신펀드」('20년 825억원→4년간 3,000억원)를 통해 자금지원

- **(예산)**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 등 예산지원* 확대 및 예산집행기관(핀테크지원센터) 역량 강화 추진

* 테스트비용 지원(52.5억→80억) 등 ('19년)101억원 → ('20년)199억원

- **(해외진출)** 해외 데모데이 등 금융권-핀테크-정부 간 협업을 활용한 '핀테크 로드' 개최 및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20.5월) 개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 개최	'20.1월	
	2020년도 핀테크 지원사업 집행계획 발표	'20.1월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20.3월	
2/4분기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개시	'20.4월	
	온라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개최	'20.5월	
3/4분기	핀테크지원센터 역량강화 방안 마련	'20.7월	
	Front 1 핀테크 협업공간 조성	'20.7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 (이해관계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등

☐ 기대효과

- 핀테크 생태계 고도화 및 핀테크 스케일업을 통해 금융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핀테크 선도업체 출현 지원
-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글로벌 핀테크 영토확장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핀테크 지원 사업(Ⅲ-3-일반재정①)			
① 핀테크 지원 사업(1134)	일반회계	101 (101)	199 (199)
■ 핀테크 지원 사업(301)	일반회계	101	1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부스 개수	신규	신규	54	75	'19년 박람회 부스 개수, '20년은 온라인 기반으로 박람회가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공간 제약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20년 부스 개수를 75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부스 개수	보도자료 및 박람회 홈페이지 등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Ⅱ-1-②)

□ 추진배경 (목적)

-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19.4.1. 시행)
 - 혁신성·소비자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장테스트에 필요한 규제특례 부여
-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장(場)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①비대면(Untact) 거래 확대(新비즈니스), ②빅데이터·인공지능 접목 및 플랫폼의 진화(新기술), ③원격근무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솔루션 확대(新인프라)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예정(2월, 3월, 5월, 6월, 9월, 11월, 12월)
 - 샌드박스 신청 접수 실시(수시)
- 지정대리인 심사 등을 거쳐 핀테크기업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지정 예정(4월, 5월)
 -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실시(4월, 6월이후)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5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년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월	
	'20년 2,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3월	
2/4분기	4-2차 지정대리인 지정	'20.4월	
	'20년 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5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5월	
	'20년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6월	
3/4분기	'20년 6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9월	
4/4분기	'20년 7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1월	
	'20년 8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 기대효과

-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 이용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등 효과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핀테크 지원 사업(Ⅲ-3-일반재정①)				
①	핀테크 지원 사업(1134)	일반회계	101 (101)	199 (199)
	■ 핀테크 지원 사업(301)	일반회계	101	1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신규	신규	77	40	'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목표 지정건수 설정 - 지정 개수뿐만 아니라 혁신금융 서비스의 질적 요소 고려 예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보도자료 등

③ 데이터경제 활성화(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신용정보법 개정('20.8월 시행)으로 가명·익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 결합 허용 등 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 통신료·전기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전문CB, 개인사업자CB,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새로운 산업이 도입
-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도입 등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
- ➡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빅데이터 인프라]** 가명·익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데이터 결합 활성화 추진

*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국가지정 기관

- **[신산업]**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CB,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신규 산업에 혁신적인 플레이어 진입 허가
- **[정보보호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의 상시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활용 동의제도 운영(등급제, 동의서 양식 개편)

※ 상시평가제 및 정보활용 동의제도는 '21.2월 시행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20.3월	
2/4분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20.5월	
	마이데이터 허가 방안 발표		
	상시평가제, 동의등급 제도 운영방안 발표	'20.6월	
3/4분기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0.8월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		
4/4분기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CB,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20.10월	
	상시평가제 시범 운영	'20.12월	
	동의등급 제도 시범 운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전 국민
- (이해관계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 기대효과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의 활성화로 데이터 기반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속화
-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 등 새로운 산업 도입으로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보호가 강화되고, 소비자가 정보활용 동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하는 동의 여건을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신규 데이터 산업에 허가 받은 기관 수	신규	신규	신규	5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 3개 개인사업자CB업 수 1개 비금융전문CB업 수 1개	허가 받은 사업자 수	-

④ 디지털 금융시장·인프라 고도화(II-1-④)

□ 추진배경

- 금융 분야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고도화 필요
- 금융·ICT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금융의 산업·시장·인프라·보안 전반을 개선하여 금융혁신의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핀테크 유니콘 기업의 활발한 출현과 디지털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편
-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으로 간편결제·송금,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보호 의무 신설* 및 플랫폼 영업 규율 확립**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도입

* 고객 선불충전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 및 관리 의무 부과

**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영업시 행위규칙 확립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마련	'20.6월	
3/4분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20.9월	
4/4분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
- (이해관계집단)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 기대효과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한 새로운 결제서비스 도입 등 금융플랫폼 활성화 및 유니콘 기업의 활발한 출현
- 서비스 고도화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 및 금융 편리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 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마련	새로운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전자 금융업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 융업 종합개편방안 마련	방안 발표	보도자료 등

(1)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 혁신형 금융산업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진입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실시하고 스폴라이센스 및 임시허가 등 도입 추진
 -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 신설, 수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제도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공급금액	1,371 억원	-	6,530 억원	7,000 억원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인 6,530억원을 감안하여 '20년에 7,000억원을 목표로 설정	각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규대출실적을 금감원을 통해 집계	보도자료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I-1.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금액(억원)	6,530	7,000	-	-	-	-

(3) 세부 추진계획

-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제개정 또는 경쟁도평가 실시
 - **(진입규제 완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 보험업 진입완화 필요성 검토 위한 경쟁도 평가 실시

- **(신탁제도 개선)**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 신설 등을 통해 특화 신탁사 (지식재산권 신탁, 유언신탁 등)의 진입을 촉진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우리경제의 저성장국면 진입 등 향후 금융시장 전망 악화, 신규 금융사의 부실화 우려로 진입규제 완화에 부정적일 가능성
- 경쟁도 평가 결과, 연구용역 등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고려하여 관리과제 추진

(5)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6)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관리과제명(Ⅱ-2-①) :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진입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치우쳐 보수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금융산업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
 -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참가자의 진입을 위해 특화금융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금융소비자가 혁신적 서비스, 가격 경쟁에 따른 혜택 등을 충분히 누리도록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 완화 등 추진
 -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
- **(임시허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20.12월~)
 - 샌드박스 테스트 결과 혁신성,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이 입증되었으나, 개별법에 따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
- **(경쟁도평가)** 보험업 진입완화 필요성 검토 위한 경쟁도 평가 실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스몰라이센스 도입방안 발표	'20.12월	
	보험업 경쟁도평가 발표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진입규제 정비로 특화금융사 등이 설립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가격적인 측면의 혜택 향유 가능
- **(이해관계자)** 시장 참여자 확대로 기존 금융회사들은 보다 높은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

☐ 기대효과

-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가격 경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보험업경쟁도 평가	신규 은행 부 동 산 신 탁 업 경 쟁 도 평 가	보험 업 법 개 정 안 발 의	보험 경쟁도 평가	보험업 경쟁도 평가	진입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실시	보험업 경쟁도평 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	보도자료 배포

②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Ⅱ-2-②)

□ 추진배경 (목적)

- 신용정보법 개정('20.1월중 공포예정)에 따라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필요

*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19.4.9일 발표) 후속조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CB, 빅데이터 제공서비스를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카드회원의 결제정보를 보유한 카드사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겸영 허용(시행령 개정)
 - *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와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 **(개인사업자CB)** 사업자 결제정보를 보유한 카드사에 소상공인등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CB' 겸영 허용*(시행령 개정)
 - *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
 -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카드사가 업무관련 취득정보(빅데이터)를 분석·(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제공·자문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확대(감독규정 개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20.5월	
3/4분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20.8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 가능

☐ 기대효과

-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가능
 - 카드회원은 카드결제정보 등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용관리·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 가능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상세 매출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신규	신규	신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카드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필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여부	보도자료 배포

③ 신탁제도 전면 개편(Ⅱ-2-③)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저금리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전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해외 주요국은 신탁을 활용하여 금융·비금융 재산을 종합적으로 운용·관리·보관하는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 (미) 유언신탁, 보험금청구신탁 등 (일) 지적재산권신탁, 후견신탁 등

- 그러나, 우리는 신탁이 주로 금융상품 판매수단(vehicle)으로 활용되고, 종합 자산관리제도로서 본연의 기능은 미흡

* 특정금전신탁 유형별 비중('19.8월) : ELT 11%, 정기에금형 24%, 채권형 15%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후대비,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20.下)
 - ❶ (재산범위 확대)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금전, 부동산 등)에서 소극재산(자산에 결합된 부채) 및 담보권 등으로 대폭 확대*
 - ❷ (진입규제 정비) 전문 신탁업 인가단위 신설 등을 통해 특화 신탁사(지식재산권 신탁, 유언신탁 등)의 진입을 촉진
 - ❸ (운용방식 다양화)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일체에 대해 효과적인 자산관리 가능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신탁업 제도개선 TF 운영	'20.6월	
3/4분기	신탁업 제도개선 TF 운영(계속)	'20.7월	
4/4분기	신탁업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20.10월	
	신탁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자산관리 수요가 있는 금융소비자 및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 등
- (이해관계집단) 신탁업자 및 신탁업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잠재 신탁업자 등

☐ 기대효과

- 신탁업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특화 신탁사의 진입 등으로 기업자금조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시) IP 전문 신탁사가 활성화될 경우 IP 보유기업의 IP를 통한 자금조달 용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신탁업 전면 개편				제도 개선안 마련	전문가 및 업계 TF 구성을 통해 신탁업 전면 개편안 마련	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성과목표II-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업무담당자들의 책임성 제고
- ☐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금융기관검사및제재 규정」개정	-	-	-	개정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 추진	감독규정 개정안의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여부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금융위원회 공고문을 통해 확인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70	80	90	100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의 선정과 공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2020년도에는 100점을 목표로 설정	대상과제 선정 정도(A)+과제내역서 공개 정도(B)*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홈페이지 (www.fsc.go.kr)의 정책실명제 코너

(3) 세부 추진계획

- ☐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 ('20.상반기)
-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금융기관·협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20.하반기)

- 주요 금융정책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내 역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포털 및 홈페이지에 공개
 -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금융정책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민신청실명제('20년 4월·7월·10월) 실시
- '20년말까지 1,133개 금융규제(54.7%) 정비를 완료하고, '21년말까지 100% 정비 추진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면책대상 업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금융정책 및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인 추가지정·변경 등 필요
 - 제도개편 뿐만 아니라,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감원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Ⅱ-3-①)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면책대상]** ①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②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을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
 -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면책요건]**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②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면책추정 제도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담 완화
- **[면책절차]**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
 - (사전적) 금융기관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신청절차 마련
 - (사후적)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한 면책심의 신청절차 마련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편방안 마련	'20.3월	
2/4분기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	'20.4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20.4월	
3/4분기	개편 면책제도 운영 (계속)	-	
4/4분기	개편 면책제도 운영 (계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혁신금융,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면책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 (이해관계집단)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벤처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기업 등

☐ 기대효과

- (사전적)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사후적)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면책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법규 위반으로 지적을 받더라도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금융기관검사및제재 규정」개정	-	-	-	개정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 추진	감독규정 개정안의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여부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금융위원회 공고문을 통해 확인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확대(Ⅱ-3-②)

☐ 추진배경

- 우리 위원회의 주요 금융정책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현안,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중점관리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추진배경, 과제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추진내용 등

-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20.3월	
2/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1차)	'20.4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20.5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공개	'20.6월	
3/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2차)	'20.7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내역서 현행화	'20.8월	
4/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3차)	'20.10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내역서 현행화	'2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전체

☐ 기대효과

- 주요 금융정책의 담당자, 주요내용, 추진이력 등을 공개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
- 주요 금융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내역서를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효과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정도	70	80	90	100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의 선정과 공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2020년도에는 100점을 목표로 설정	대상과제 선정 정도(A)+과제내역서 공개 정도(B)*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홈페이지(www.fsc.go.kr)의 정책실명제 코너

A : 정책실명 대상사업 선정 정도

점 수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선정률*	200% 이상	150%~199%	100%~149%	50%~99%	50% 미만

* 선정률 = 대상사업 수 / 처리과 수(27개, FIU는 1개 처리과로 계산) * 100

B : 정책실명 대상사업 공개 정도

점 수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공개율*	100%	95%~99%	90%~94%	85%~89%	85% 미만

* 공개율 = 홈페이지 공개 사업내역서 수 / 대상사업 수 * 100

③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Ⅱ-3-③)

□ 추진배경 (목적)

-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19.3월)하여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 중
 - 2019년에는 행정규칙과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법령 전반에 걸쳐 확대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에 대해 2년간 2단계에 걸친 정비계획 마련
 - 1단계로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정비하고, 21년말까지 100% 정비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 검토	연중실시	
2/4분기	실험법 등 31개 법령 정비(법률 15개, 시행령 13개, 시행규칙 3개)	'20.5월~6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 검토(계속)	연중실시	
3/4분기	여전법 등 27개 법령 정비(법률 11개, 시행령 11개, 시행규칙 5개)	'20.7월~9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 검토(계속)	연중실시	
4/4분기	여전법 등 27개 법령 정비(법률 11개, 시행령 11개, 시행규칙 5개) (계속)	'20.10월~1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 검토(계속)	연중실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규제개선으로 혜택을 얻게 되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업권별 협회·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등

□ 기대효과

-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불합리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를 해소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법령 규제정비 건수				1,113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 2,070건의 50% 이상(54.7%)	입증책임위원회 법령검토 실적	입증위원회 의결서 등

전략목표 Ⅲ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 서민금융공급 확대,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 운용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4	12	2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조원)
Ⅲ-1. 서민금융 안전망을 개선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감면율 금융회사 서민금융재원 출연액 근로자햇살론 수혜자 만족도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찾아주기 소비자신용법 입법예고 미소금융 전통시장 특별자금 공급액
Ⅲ-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마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융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Ⅲ-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금공급 독거노인 찾아가는 휴면예금 안내 장애인 ATM 보급 노력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 확대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보증자리론 지원체계개선 캠코의 주담대 연체차주 지원 주택연금 가입연령인하 주택연금 관련제도개선사항 주택연금연간지급액

(1) 주요내용

□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리단층 현상을 개선하여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

-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보증보험 연계 사잇돌 대출 상품을 출시('16.7월*)하고,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 마련

* (은행)'16.7월, (저축은행)'16.9월, (상호금융)'17.6월

**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많을수록 저축은행·여전·신협법상 적용되는 대출규제 준수가 용이해지도록 업권별 규정 개정

□ 연체채무자 보호·재기를 위해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규율* 마련 추진

* 미국('68년), 영국('74년), 독일('90년), 호주('09년) 등 주요국은 연체채무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소비자신용규율 旣마련

□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수법 및 대체이용수단을 적극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저신용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도 확대 공급

□ 금융규제의 감시·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현장소통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연령의 금융니즈를 발굴하고,

-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회 주도하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조원)	-	0.37	1.33	3.16	5.28	(13.48)	'16~'19년중 중금리대출 연평균 공급액(1.64조원)을 매년 공급할 경우 '24년말 누적공급액	은행·저축은행·상호 금융의 사잇돌대출 실적 합산	서울보증보험 집계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Ⅲ-1.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	7.2	8.0	7.0	7.0	7.0
Ⅲ-2.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	-
Ⅲ-3.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	-	방안마련	-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금융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 제기 가능
-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설계 필요

(4)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재정지원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금융자산 출연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재원 추가 확보
 -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보호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 촉진
 - 소비자신용법 제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조원)	6.9	7.2	8.0	7.0	'16~'19년 연평균 공급액 6.7조원 고려 및 업무계획에 '20년 중 7.0조원 공급 발표	'20년 중 서민금융상품 공급액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감독원 통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감면율(%)	29	28	30	33	'19.2월 발표한 신복위 맞춤형 채무조정 감면체계 개선목표('22년까지 감면율 39% 달성) 감안	채무원금감면액 / 채무조정전 채무원금	신용회복위원회 통계

(3) 세부 추진계획

☐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충 및 공급 확대

-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 공급('16~'19년 연평균 6.7조원 공급)
- 재정지원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추진
-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편의제고 및 권리 보호 강화

□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

- 시장·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 상품 개발 촉진('20년중 방안 검토)
-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 추진('20.上)

□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 채무자 재기지원과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대부업법 전부개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안정적인 서민금융 자원 확보 및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관리절차 규율 마련 필요 등의 요구 존재

□ 상시 출연제도,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은 금융회사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갈등 관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공급 확대(Ⅲ-1-①)

☐ 추진배경 (목적)

- 저신용 서민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면금융자산의 원권리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6~'19년 연평균 6.7조원 공급)
- 재정지원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 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20.2월	
3/4분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제출	'20.9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자(수혜자)
- 출연 금융회사(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성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19	'20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Ⅱ-2-일반재정①)				
①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		복권기금	1,750	897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328)			1,750	747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329)			-	1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금융회사 서민금융재원 출연액 (억 원, 누적)	1,290	2,912	4,920	6,000	법개정 등을 고려하여 '19년 실적치 대비 1,000억원 누적 출연액 확대	누적 출연액 합계	서민금융진흥원 통계
근로자햇살론 수혜자 만족도 (점, 공통)	신규	83.4	81.0	80.1	복권기금운용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베타분포 방식으로 설정 * 과거최저실적(10년, 71.0)과 과거 최고실적(14년, 85.5), 19년 실적치(81.0)의 4배한 값의 합을 6으로 나누어 설정	만족도 조사의 평균점수를 베타분포로 계산	서민금융진흥원 통계

②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Ⅲ-1-②)

☐ 추진배경 (목적)

- 시장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상품 설계방식, 대고객 채널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장·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 상품 개발 촉진('20년중 방안 검토)
-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지급한도 상향 등 온라인 지급서비스 확대('20.上)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휴면금융자산 온라인 지급한도 상향	'20.6월	
3/4분기	어카운트인포와 연계 시행	'20.9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자 및 이용자, 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수혜자)
- 금융회사(이해 관계자)

☐ 기대효과

-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상품체계 구축
- 휴면금융자산 청구 간소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휴면금융자산 원권리 자 찾아주기 실적 (억원)	356	1,292	1,553	1,800	'18년, '19년 원권리자 찾아주기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원권리자가 찾아 가는 금액(휴면 예금, 휴면보험 금)	서민금융진흥원 통계

③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Ⅲ-1-③)

☐ 추진배경 (목적)

-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채무자 재기지원과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절차·방법 규율을 마련(대부업법 전부개정)
-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웠던 무소득자, 채권자 부동의건, 협약外 채무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방안 모색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발표 및 입법예고	'20.8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연체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수혜자)
- 채권 보유 금융회사(이해 관계자)

☐ 기대효과

-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 형성
- 신복위 채무조정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소비자신용법 입법예고				입법 예고	'20년 중 입법예고 추진	입법예고	관보 게재

④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지원(Ⅲ-1-④)

□ 추진배경 (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의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등을 지원

*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추진('20.3.11일) 및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추진 방안('20.3월) >

- ① (전통시장 지원)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100억원 추가 공급
- ② (신복위 채무조정)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에게 조정 채무 상환 6개월간 유예
- ③ (행복기금 및 캠프) 행복기금 및 캠프의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로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 ④ (미소금융)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 → 유예 종료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연장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4차 비경) >

- ① (단일채무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원금 상환 유예(6~12개월) 등을 지원
- ②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우려시 상환유예(최장 1년) 및 장기연체시 원금감면(감면율 +10%p 우대, 최대감면율 70%) 등을 지원
-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개별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의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 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시행	'20.4월	
3/4분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시행	'20.7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수혜자)
- 채권 보유 금융회사(이해 관계자)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미소금융 전통시장 특별자금 공급액(억원)	-	-	-	100	특별자금 100억원 공급 계획 발표	공급액 합계	서민금융진흥원 통계

(1) 주요 내용

- ☐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새로운 권리와 제도 도입
- ☐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추진
-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 효율적인 지원대상 선정·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21.4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추어 법률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감독 규정 등 하위 규정 마련	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 여부	보도자료 (금융위 홈페이지)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국회 설명 등 쟁점해소 노력을 지속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Ⅲ-2-①)

☐ 추진배경 (목적)

-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 개선
-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상품에 대한 중요 정보 설명이 의무화되고,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금융소비자법 제정	'20.2월	
2/4분기	금융소비자법 하위규정 TF 출범 등	'20.4월	
3/4분기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8월	
4/4분기	하위 규정(감독 규정 등) 제정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21.4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추어 법률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관보 발표

②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III-2-②)

□ 추진배경 (목적)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불합리한 보험제도*, 보장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저하될 우려

*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7.11.)에서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음

**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차량공유 확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 자동차보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실손의료보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상품이나, 과잉진료 등으로 높은 손해율* 및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구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불편함도 존재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 ('17) 121.3 → ('18) 121.2 → ('19.9월) 130.6

**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

-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 ①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 ②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

③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제고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④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상품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위해 범부처 TF***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예)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 예) 보험사 중심으로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의료기관 참여확대 유도

***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3월	국토부 합동
3/4분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발표	'20.8월	기재부, 복지부 합동
4/4분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자동차보험)

- (수혜자) 자동차보험 소비자(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토부, 손해보험업계, 의료계, 정비업계 등

○ (실손의료보험)

- (수혜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약 3,800만명)
- (이해관계집단)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의료계 등

□ 기대효과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제고
-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	-	-	종합 방안 마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지를 평가	종합 개선방안 발표	보도자료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	개선 방안 마련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

③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Ⅲ-2-③)

☐ 추진배경 (목적)

- 최근 가계의 부채의존 심화,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확산,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등으로 금융교육의 역할 부각
 -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간의 교육이 개인이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했다는 평가
-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은 가질 수 있도록 2020년을 원년(元年)으로 하여 금융교육의 “질적성장”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육 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이해력지도” 개발, 콘텐츠 인증제 등 추진
-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교육 강사 (성명, 경력 등) DB 구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발표	'20.4월	
3/4분기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7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 기대효과

- 정부가 교육콘텐츠의 질적수준을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가능
- 청소년의 또래의 금융고민 등 올바른 금융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 효과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금융교육 개선 기본 방향 발표	-	-	-	개선 방안 마련	금융교육 질적 방향 및 양적 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종합 개선방안 발표	보도자료 등
금융교육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	-	-	규정 제정	금융교육콘텐츠의 질적수준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규정제정 실적	규정제정 실적

④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Ⅲ-2-④)

□ 추진배경 (목적)

- 사회적금융시장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확대 [32% ↑: 3,230억원('19년) → 4,275억원('20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중진공·소진공 등 공공기관 정책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도 확대
[26% ↑: 960억원('19년)→1,210억원('20년)]
- (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을 통해 보증지원 확대
[24.3% ↑: 1,850억원('19년) → 2,300억원('20년)]
* 보증수수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유도
- (투자) 한국성장금융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대상 임팩트 투자* 실시
[82.1% ↑: 420억원('19년)→765억원('20년)]
* 재무수익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임팩트)를 동시에 추구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개시(소진공)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20년도 자금배정(서금원)	'20.1월 '20.3월	
2/4분기	'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및 실적점검(금융위)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 제공(신보)	'20.4월 '20.4월	
3/4분기	'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및 실적점검(금융위)	'20.8월	
4/4분기	'20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및 DB 고도화(서금원)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및 실적점검(금융위)	'20.10월 '2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가치 및 금전적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이해관계집단)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활성화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신규	1,937 억원	4,531 억원	4,275억 원	공공부문에서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공급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들의 지원금 합산	각 기관들을 통해 현황자료 취합

(1) 주요 내용

- ☐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
- ☐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 ☐ 은퇴 노령층 노후보장 방안 확충,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지원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	-	-	마련	수요자 맞춤형 정책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 지원 방안) 발표	보도자료 발표 여부	보도자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소비자에게 수혜가 되는 반면, 금융사 부담은 적어 갈등 요인 미미
- ☐ 신용평가 역량이 미비한 신규 시장을 조성하거나(중금리), 공적재원투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사 등의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함
- ☐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책수혜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III-3-①)

□ 추진배경 (목적)

- 금리구조 단절화로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 이용
 - 이로 인해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 금융기관도 중신용자 신용평가 정보·노하우 부족으로 취급 주저
- ⇒ 중금리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증보험 연계 사잇돌 대출 상품을 출시('16.7월*)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 (은행)'16.7월, (저축은행)'16.9월, (상호금융)'17.6월
 - **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많을수록 저축은행·여전·신협법상 적용되는 대출규제 준수가 용이해지도록 업권별 규정 개정
- '18.10월, 보다 정교한 정책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 발표
 - ①사잇돌 대출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3.15조원 → 5.15조원)하고 지원요건(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출 공급
 - ②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여 중금리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카드로 중금리대출 출시로 공급기반 확대
 - ③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지원

- '20년에도 중금리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既추진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①사잇돌대출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하여 마중물 역할을 지속
- ②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업권별 차등화('19.3분기~) 및 카드론 중금리 출시 이후의 중금리대출 실적 점검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③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중금리대출의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현황 지속 모니터링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 확대(1월)	'20.1월	
2/4분기	■ 「중금리대출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6월	
3/4분기	■ 민간중금리대출 요건 및 인센티브 체계 등 정비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20.9월	
4/4분기	■ 중금리대출 현황 모니터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 국민
- (이해관계자)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여전사 등 금융기관

☐ 기대효과

- 중신용자 등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1.33 조원	3.16 조원	5.28 조원	7.28 조원	'19년중 2.12조원을 공급(누적 5.28조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20년중에도 2조원을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 실적 합산	서울보증보험 집계

② 코로나19 극복위한 자영업자 금융지원(III-3-②)

☐ 추진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통해 경영애로 해소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은행이 지역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1.5%) 특별 대출상품을 공급('20년중 7.8조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초저금리대출 신규상품 출시	'20.1월	
2/4분기	초저금리대출 운영 및 점검	계속	
3/4분기	초저금리대출 운영 및 점검	계속	
4/4분기	초저금리대출 운영 및 점검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이해관계자) 기업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19	'20
코로나19 극복위한 자영업자 금융지원(III-3-②)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2,000	5,9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단위 : 조 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기업은행 초저금리 공급실적	-	-	1.8	7.8	재정출연 등을 통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공급 목표	기업은행 제출 실적	기업은행 제출 자료

③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Ⅲ-3-③)

□ 추진배경 (목적)

-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반면,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

* '19.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

- 장애인의 **ATM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용 ATM을 설치·도입('10년)하고 있음

- CD·ATM 제작·설치 시 장애인 편의성을 고려토록 하는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애인용 ATM 설치 비중을 확대하고, 각 기능별 성능을 개선하여 ATM 이용 편의성 제고

- 장애인용 ATM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및 홍보 강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찾아가는 휴면예금 조회 문자 안내 통지 및 지급 중(계속)		
2/4분기	장애인용 ATM 설치 현황 파악 및 비중 확대 추진 협의(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고령자·장애인 금융소비자
- (이해관계집단) 금융회사, ATM 제조사, 노인복지사 등

□ 기대효과

- 휴면재산을 찾아 쓰지 못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 활력 부여
- 장애인이 ATM 이용 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게 배려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독거노인 찾아가는 휴면예금 안내	신규			4회	휴면예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에게 분기별 1회 안내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독려	안내 실적 (횟수)	각 기관들을 통해 현황자료 취합
장애인 ATM 보급 노력	신규			90%	장애인의 ATM 접근성을 고 려하여 90%이상 설치되도록 설정	전체 ATM 중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ATM 보급 비율	각 기관들을 통해 현황자료 취합

④ 무주택·실수요 차주 주거부담 경감 (Ⅲ-3-④)

□ 추진배경 (목적)

- 부동산시장·가계부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할 있도록 주택금융 지원체계 정비
- 주택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청년층 등 무주택 세입자 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 전 은행권 협의를 거쳐 공급한도 상향 (1.1조원 → 4.1조원)
 - 비대면 취급채널을 확대하고, 대학생 등 청년층 접점(대학가 등) 홍보 등 맞춤형 공급을 통해 지원 확대 ('19년 0.7조원 → '20년 1.5조원)
 - 무주택 전세대출 차주의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전세대출 +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신규출시·공급
- * (전세금반환보증)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추심하는 상품(세입자 손실부담 경감)

※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각각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가입편의성이 증가하고, 가입비용도 30%수준 절감 기대

② 서민 실수요 1주택 차주 지원 확대

- 정책모기지의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 실수요자부터 집중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지원체계 정비
- 보금자리론을 통한 주택구입 후 증액대출 실행 제한
- 유주택자의 보금자리론 구입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단축(현재 2년)

-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 서민 연체차주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가적 채무조정 기회 부여
 - 채무상황이 어려운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지원 제도(Sale & Leaseback)” 지원
- * 차주가 자산관리공사로 주택을 매각해 채무청산 → 해당주택에서 최대 11년간 임차거주

③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가입범위 확대
 - 가입연령(60세 이상) 및 가입주택 가격상한(현재 시가 9억원) 완화
- 가입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이용시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
 -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 허용을 통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공급한도 확대	'20.3월	
	보증자리론의 무주택 실수요자 집중 지원	'20.3월	
	캠코의 (채권)매입형 채무조정·주택매각후 재임대 프로그램 출시	'20.3월	
2/4분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시행 (60→55세)	'20.4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활용(서울시 협업)	'20.6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20.6월	
4/4분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국회 제출)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부모와 독립하여 대출 등을 통해 주거비를 조달하는 청년층
- 무주택 전세거주 중으로 전세금 손실위험을 걱정하는 가구
-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으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 계층
-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한 노령층 주택보유 가구

□ 기대효과

- 전·월세 청년 및 무주택·실수요자 등의 주거부담을 경감
-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소득 확보 및 생활안정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확대 (조원)	신규	신규	0.7	1.5	'19년 공급추이와 청년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상향	'20년 중 청년전월세 프로그램 실행액	주택금융공사 집계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신규	신규	신규	상품출시	시행령 개정완료를 통한 취급 근거 마련 및 신규상품 출시	출시여부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등
보증자리론 지원체계 개선	신규	신규	신규	지원체계 개선	제도개선 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	주금공 내규 개정여부	주택금융공사 공지 등
캠코의 주담대 연체 차주 지원프로그램 도입	신규	신규	신규	상품도입	신규 지원 프로그램 출시여부를 목표로 설정	캠코를 통한 프로그램 출시 여부	캠코 보도자료 등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60세→55세)	신규	신규	신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여부, 가입연령 인하여부를 확인	시행령 개정 여부	보도자료
주택연금 관련 제도개선사항(법개정)	신규	신규	신규	법개정 추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주금공법 개정 추진	법안 제출 여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주택연금 연간지급액(조원)	0.7	0.9	1.0	1.1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연금지급액 확대 (결과지표)	주금공 공급실적	주금공 통계

기 본 방 향

◇ 창업·혁신부문 지원 등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및 거래량 증가*, 대형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 모험자본 공급액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 신규상장/일거래량(개, 조원) : ('16말) 70/3.4 → ('19말) 78/4.3

* 대형증권사 모험자본 공급규모(조원) : (13) 0.08 → (19) 1.59

- 그러나, 성장·혁신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제도적 제약*이 있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 * 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 체계에 공백이 존재
- ② 증권사가 기업금융업무 수행에 있어 건전성 규제 등 제약이 존재
- ③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자본시장 인프라의 발전수준이 미흡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나아가 금융 산업을 선진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8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①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금융그룹감독 체계 정비 추진정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운영의 충실도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2.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①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완료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②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기능 개선
	③ 대부업 감독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실적(만 건)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 총자산 규모
	①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량강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규모(조원)
	②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조원)
	③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증권공모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실적(조원)

전략목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주요내용

- ☐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
- ☐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제재체계 개선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
- ☐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55.0	54.1	55.9	52.2	53.0	55.0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매년 전년 대비 0.5%p씩 증가를 가정(단, '20년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19년 수준 유지를 가정)	(비금융법인기업의 채무증권부채 + 지분증권부채) / 비금융법인기업의 총부채	한국은행 보도자료(자금순환)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IV-1. 금융분야 공정경제 법안 국회 상정 및 입법지원	법안 상정	법안 논의	법안 제상정 및 입법 지원	-	-
IV-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8.9	9	9.1	9.15	9.2
IV-3. 국내 증권사 총자산 규모	439.0	482.6	437.2	452.9	503.3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공정경제 기반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
 - 또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투자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타날 수 있음
-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설득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
 - 아울러 제도개선과정에서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4)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금융그룹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추진 등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 ❶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 중심으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금융계열사 참여)하여 그룹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 (감독대상)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 영위 그룹)
예) 삼성, 현대차, DB, 한화 등 금융그룹

- ❷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동반부실 등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

-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국회제출 · 모범규준 개정·연장	금융분야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제도화 노력을 목표 치로 설정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회제출, 모범규준 개정·연장 여부,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 지배구조법 개정	성과목표 관련 법개정안이 임 기만료 폐기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재입법절차 추진	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재입법절차 진 행여부* 및 시행령 마련 여부 *국회제출→상임위 소위통과 →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법 사위 소위 통과 → 법사위 전체회의 통 과 → 국회통과	

(3) 세부 추진계획

☐ 금융그룹 감독제도 법제화 노력

- 20대 국회 만기전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

* 박선숙 의원 발의안('18.6월), 이학영 의원 발의안('18.11월)

- 21대 국회에서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금융그룹 모범규준 개정·연장

- 法 제정 이전에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과 이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이 필요
 - 금융그룹감독은 현존하는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서 그룹리스크를 금융그룹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 제도 도입 여건 평가·보완 등을 위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법 개정안('18.9월 국회제출)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동일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

(4)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금융그룹감독) 그룹차원의 새로운 규제(예: 자본규제) 도입으로 언론, 업계, 국회로부터 중복 · 과다규제 주장* 등 비판 소지

* 개별 금융회사에 건전성 규제가 이미 적용되므로 그룹차원 규제는 중복 규제라는 주장

- ①주요 금융선진국이 이미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한 점, ②개별 금융법이 포착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점 등에 대해 의원 등을 설득하여 제도도입 여건 조성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자본 중복계상, 내부거래 편중,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체계적·일관된 정비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필요함을 강조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야당과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심사요건 강화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IV-1-①)

□ 추진배경 (목적)

-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도입*,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추진중 ※ 국정과제 24-4

* IMF는 '13년 금융부문평가(FSAP)시 금융그룹 위험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개선 촉구

- '18년 도입방안 발표(1월), 모범규준 시범적용*(7월), 법안발의(6, 11월), '19년 모범규준 개정(7월) 등 제도의 기본 골격 마련

* 7개 금융그룹 대상(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롯데는 '19.12월 제외)

- ⇒ 모범규준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그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를 뒷받침하고, 금융회사·금융그룹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그간 제도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금융그룹 감독체계 정비검토 병행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범규준을 개선하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마련
- (모범규준 운영 내실화) 모범규준의 지속적인 적용 등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제도안착 효과 도모
 - 모범규준 개정·연장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감독대상 지정, 금융그룹 임원·실무자 교육 등 금융그룹감독 여건 조성

*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8월), 그룹공시(9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문가 세미나 참여	'20.1월	
	금융그룹 CEO 간담회	'20.2월	
2/4분기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	'20.5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연장	'20.5월	
	금융그룹감독 실무TF 개최	'20.5월	
	금융그룹감독 감독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20.5월	
3/4분기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모의평가 실시	'20.8월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연구용역 완료	'20.9월	
4/4분기	금융그룹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0월	
	위험관리 실태평가 실시	'20.11월	
	시행령안 및 감독규정안 등 하위법규 보완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소비자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감독대상 금융그룹도 고객 신뢰 증대, 기업가치 상승 등 기대

○ (이해관계집단) 감독대상인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시 신규 자본규제 준수, 계열사 지원 제약 등의 영향으로 제도도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계열사간 출자관계에 따른 자본의 중복·과다계상을 방지하고 특정 계열사에 위험 집중 및 그룹 동반부실 예방

○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도입으로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다수 금융선진국(예: EU, 미국, 호주, 일본)은 금융그룹감독제도를 既 운용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금융소비자보호(성과관리 비대상)				
① 금융소비자보호(1831)		일반회계	1 (전체단위 사업비)	0.2 (전체단위 사업비)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1831-304)		1	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금융그룹감독 체계 정비 추진정도			달성	50점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를 통해 금융그룹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 므로 각 추진단계를 점수화 하고, 합계 50점을 목표치로 설정	· 감독체계정비 의견수렴 - 전문가 세미나 등(10점) - 감독기관 협의체(10점) · 하위법규 제정 관련 - 시행령안 보완(10점) - 감독규정안 보완(10점) · 국제적 규범과 비교를 통한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관련 연구용역(10점)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운영의 충실도			달성	50점	법제화 이전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대상 교육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의 충실한 운영과정을 점수화하고, 합계 50점을 목표치로 설정	· 모범규준 운영 관련 - 감독대상 재지정 (10점) - 자본 적정성 평가(10점) - 위험관리실태평가(10점) · 금융그룹 의견수렴 및 교육 - 금융그룹 CEO간담회 및 금융그룹감독 실무TF(10점) - 교육·세미나 개최 (10점)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내부자료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IV-1-②)

□ 추진배경 (목적)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충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선정되거나, 요건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다수
- * 심사대상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
-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시 대표이사의 영향력 행사로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고액 연봉 임원들의 성과보수에 대한 충분한 공시와 주주들에게의 설명의무도 미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주주적격성 심사 내실화)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등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추가
 - 심사대상 확대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만큼 상임위 병합심사 및 의원질의시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된 심사대상을 실질적인 지배력을 반영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
- * 채이배 의원안('17.9월), 유동수 의원안('18.11월)
- (임원선임 투명성 강화) CEO가 본인의 연임을 위한 임추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CEO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임추위 참석도 제한
-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가 일정금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 (이사회 운영 선진화)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도록 규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의원실, 정무위 행정실 설명 등 지속 (법안폐기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동일 내용으로 개정안 국회제출	'20.1~6월 '20.6월	
3/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의원실, 정무위 행정실 설명	'20.7~9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20.7~9월	
4/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의원실, 정무위 행정실 설명	'20.10~12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20.10~12월	
	(법개정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	ㄸ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해관계자) 금융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재산권 제약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직·보수통제가 강화되어 금융권 종사자 일부의 반발 예상

☐ 기대효과

-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 내부이익이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	-	-	지배 구조법 개정 및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내규개정 유도 및 참고자료 배포	①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재입법절차 추진 -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를 대비 하여 시행령(안)도 선제적으로 마련 ② 법개정 이전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규 개정 여부, 핸드북(best practice) 등 참고자료 마련·제공 여부를 성 과지표에 추가	• 법개정안 국회 제출 등 재입법 절차 진행여부 및 시행령(안) 마련 여부 * 국회제출→상임위 소위통과→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소위 통과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회통과 • 내규개정 사례 및 핸드북 등 공식참고자료 (내부참고 제외) 마련여부	• 법령 개정안 등 공식적으로 활용된 자료 제출

성과목표 IV-2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1) 주요 내용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제재체계를 개선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 확립
 -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도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불법사금융·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여 금융분야의 부당행위를 철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8	8.9	9	9.1	최근 3편 평균 사건처리 건수 (건) 대비 5% 상향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V-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9	9.1	9.15	9.2	9.25	9.3

(3) 세부 추진계획

- 금융위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과의 전용선 연결
 - 금융위 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시스템과 전용선 및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하여 보안성 높은 연계망을 구축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시제도 개선은 기업 측의 부담, 투자정보로서의 활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

☐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특사경 활용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시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견을 조정할 필요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6)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IV-2-①)

□ 추진배경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에 따른 기관투자자 등의 주주권 행사 내실화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유도
- 기업의 공시역량 지원, 공시보고서 정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자율 감독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지분보유 보고·공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차등화
- 공적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보완*을 위한 단차 규정 개정 및 공적연기금의 단차반환 예외인정안 증선위 의결
 - * 10% 이상 소유주주 등은 6개월내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제도. 단, 공적연기금은 경영참여가 아닌 경우 반환의무 면제
 - 공적연기금 주주활동 증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내부통제규정 강화를 전제로 반환의무 면제
- 기관투자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의안분석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주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자문사 공시제도* 도입
 - * 의안분석 방법론, 이해상충 방지방안, 분석조직·인력현황 등 공시
- 중소·혁신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시역량 부족으로 공시의 질적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
-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5%대량보유보고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월	
	공적연기금의 단차반환 특례 보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2월	
	공적연기금의 단차반환 예외 인정안 증선위 의결	'20.2월	
2/4분기	공시제도 개선 TF 운영 및 개선방안 논의	'20.4~6월	
3/4분기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20.9월	
	의결권자문사 공시제도 관련 의견수렴	'20.9월	
4/4분기	의결권자문사 공시제도 도입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등)
- 이해관계자 : 상장회사 및 그 주주

☐ 기대효과

- 기관투자자의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가치 향상, 투자자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기업의 공시 품질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결정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연구 용역 추진	개정 완료/ 시행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완료 및 시행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 법령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책 발표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투자자 활용 편의도 제고방안 마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발표	금융위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②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IV-2-②)

□ 추진배경

- 자본시장의 불공정·불건전 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위법성이 큼
-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검사·조사 제도 및 신속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 법무부·검찰 협의 등을 통해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 형사벌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②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및 제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해외 주요국 현황 비교 분석,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검토
- ③ 금융위원회 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해 매매데이터 송수신 과정에 대한 보안성 및 효율성 제고
 - 금융위-거래소 매매데이터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전용선 구축
 - 다수의 혐의자가 연계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 시각화 및 혐의자간 연계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금융위 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 기능개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 간 연계 검토	'20.3월	
2/4분기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의 연계 구축 사업 조달청 공고 게시 및 사업자 선정	'20.5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5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관련 법무부·검찰 협의	'20.5월	
3/4분기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 진행	'20.6월~11월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20.6월~11월	
4/4분기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 완료	'20.12월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자본시장 및 일반 국민 등이 모두 수혜
- (이해관계집단) 금감원 및 거래소 등 조사심리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 제재조치 대상자 등
 - 법무부·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시 이중처벌, 형벌 실효성 저하 등을 우려

□ 기대효과

- 과징금 제도를 도입시 엄격한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형사절차에 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확산을 신속하게 제어하고 탄력적인 제제가 가능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검사, 조사,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규율 확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¹⁾	'19	'20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IV-2-정보화①) ²⁾				
① 본부 기본경비(7135) ³⁾		일반회계	98	746
■ 자본시장조사단운영(정보화)(306)		일반회계	98	7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신규			연구 용역 추진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및 제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보고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자본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은 행정제재 수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필요	자본시장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기능 개선	-			-	-	불공정거래 시스템 연계	조사시스템 연계 등 조사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 효율화 달성

③ 대부업 감독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IV-2-③)

□ 추진배경

-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규제나 단속망을 회피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 (예) ① 온라인이나 SNS(카톡 등)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중심의 검·경 단속망 회피
② 통상의 '대출'형태가 아닌 유사 신종수법 다양화 (대포폰깡, 소액결제깡)

- 고령층·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도 증가 추세

* 취약계층 이용비중(% , '17→'18) : (고령층) 26.8→41.1, (주부) 12.7→22.9

- ☞ 범죄수법·수단의 지능화·고도화, 피해우려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할 필요

* 금융분야만의 독자적 정책운용이나 통상의 검·경 수사로 효과적 적발·단속 곤란
· 온라인 영업 적발에는 검·경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관련부의 적발·단속도 필요한 상황
· 신종수법 단속에는 산재된 단속근거법 소관기관간(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협조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사전예방] 온라인 불법대출광고 차단 등 전방위적 예방체계 구축

i) 온라인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시 광고주의 불법성 (예: 무등록 대부)을 확인토록 하고, 경각심 제고 등 집중홍보

ii) 금감원의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운영을 통해 적발을 확대 하고, 적발건은 방통위와 협업을 통해 신속차단

* 기존 적발사례를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적출하고, 신종수법 지속 업데이트

- ② [단속·처벌] 경·특사경의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범정형을 상향 하고 범죄이득을 제한*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 (예) 상사법정이자율(6%) 초과수취분 무효화, 연체차주에 대한 증액재대출 불허 등

③ [피해구제]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 연계제공 및 법률지원확대

- i) ☎1332(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한번에 해결되도록’ 신고-구제-서민금융·자활지원 기관간 연계* 강화

* 금감원(신고)-법률구조공단(소송 등 법률구제)-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채무조정)

- ii)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가능 (공정추심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신설·개시	'20.3월	
2/4분기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발표	'20.5월	
3/4분기	금감원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시범 운영	'20.7월	
4/4분기	불법이득 제한, 처벌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법안 제출) 경찰·특사경 및 법무처 합동 일제단속 실시	'20.12월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불법사금융 이용차주와 대부업자의 불법추심·고금리 노출 차주
-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 차주

☐ 기대효과

- 불법사금융의 엄정 단속·처벌 및 불법영업유인 근절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여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원

☐ 재정사업 내역(피해구제관련)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추진 : 11.5억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 대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협상·상담·법률지원 등

- (소송변호사) 법정최고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반환청구, 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등 소송대리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1-일반재정②)				
① 단위사업명(1531)				
■ 세부사업명(301)		일반회계	-	1,150 ^{백만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방안 발표	범부처 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 발표	방안 마련 여부	보도자료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실적(만 건)	신규	신규	신규	1.4	적발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적발실적(8천건) 대비 적극적 수준에서 설정	금감원 모니터링에 따른 적발건	금감원 집계

성과목표Ⅳ-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
 - 증권사가 혁신성장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국내 증권사 총 자산 규모(단위 : 조원)	390.0	439.0	482.6	437.2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 규모를 감안하되, 코로나 19에 따른 증권산업 침체를 고려하여 '19년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	국내 증권사 자산의 합	금융감독원 통계 시스템

	실적	목표치				
	'19	'20	'21	'22	'23	'24
IV-3. 국내 증권사 총 자산 규모	482.6	437.2	452.9	503.3	510.9	538.0

※ '21년까지의 목표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증권산업 침체를 감안하여 직전 3개년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22년 이후는 직전 3개년 평균값의 110%로 설정

(3) 세부 추진계획

-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
 - 혁신기업의 발굴 및 자금공급과 관련된 신규업무 허용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 ☐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투자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
 - 일반국민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 마련
 - 투자 제약요인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 창업에서 성장·회수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

(4)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 투자자 피해 발생을 우려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
 -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 ☐ 제도개선과정에서 금융투자업권, 금융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아울러,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안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노력을 추진

(5) 기타 : 해당사항 없음

(6)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량강화(IV-3-①)

□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개사*)의 모험자본 공급액이 확대** 되는 등 종투사의 IB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 미래,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 ('13년말) 769억원 → ('19년말) 1.6조원

-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

*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18년말) :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회사채) 1.0%

- 종투사가 아닌 일반 증권사는 한정된 업무범위, 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해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이 곤란

- 일반 증권사는 기업에 대한 직접 신용공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 NCR 준수를 위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취득을 선호

⇒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기업의 발굴 및 자금공급과 관련된 신규업무를 허용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

-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 VC 투자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대상 대출

** 현재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 허용

*** 예) 일반증권사는 자기자본의 50%, 중기특화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
 -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
- * ①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②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③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을 상향 조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업계,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20.3월	
2/4분기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6월	
3/4분기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9월	
4/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증권사,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중소·벤처기업 등

☐ 기대효과

-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대폭 확대
-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Key Player로서의 역할 확충
-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경제의 활력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규모 (조원)	0.77	1.25	1.59	1.20	최근 3년간 모험자본 공급규모를 감안하되, 코로나 19에 따른 투자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19년 실적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	각 종합금융투자 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규모의 합	금융감독원 통계시스 템

②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IV-3-②)

□ 추진배경

- 공모펀드 산업의 경쟁력 부족, 투자자 신뢰 저하 등으로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률도 미흡**한 수준
 - * 수탁고(조원) : ('15) 213.8 → ('16) 212.2 → ('17) 217.5 → ('18) 213.6
 - ** 연간수익률(%) ('15) 3.4 → ('16) 2.0 → ('17) 13.8 → ('18) △5.4
- 高위험·高비용인 해외주식(ETP포함) 매매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 해외주식 매매금액(억\$) : ('16)15.1 ('17)24.3 ('18)36.3 ('19.1~10)39.3
- 대부분이 “非상장·非예탁회사”인 창업·혁신기업은 주식사무의 투명성·신뢰성이 미흡하고 투자 사후관리 등이 불편하여 모험 자본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메자닌채권이 과도하게 발행되면서 전환권행사 및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으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 등이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
 - * 전환가액 하향조정시 전환을 통해 받게되는 주식 수가 증가(기존 주주의 지분 감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산층의 투자수단 다변화를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 ('20.6월)
 -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상품 도입
 - * (예) 외화표시 MMF, 주식형 액티브 ETF 도입 등
 -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 규제개선, 경쟁촉진 등을 통하여 자산 운용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을 마련 ('20.12월)
 -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
 -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을 허용

-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20.12월, 시범서비스 개시)
 -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던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여 비상장투자의 신뢰성·효율성 제고
 - 벤처투자 참여자(LP, GP, 신탁사 등)간 업무(운용지시 등)를 효율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메자닌채권 발행내역 등 공시 확대,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 ('20.9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 관련 기본방향 발표	'20.2월	
2/4분기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	'20.6월	
3/4분기	메자닌채권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20.9월	
4/4분기	비상장기업 통합 투자플랫폼 시범서비스 개시	'20.12월	
	해외주식투자 수요 흡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 등 투자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혁신·벤처기업 등
- (이해관계자) 투자기회 다변화로 투자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종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 증권의 발행인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축적 기회가 확대되고,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혁신·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단위 : 조원)	3,668.7	3,732.5	3,978.1	3,793.1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하여 '20년 금융자산 목표치를 직전 3년간 평균수준으로 설정	가계 및 비영리 단체 금융자산의 합	한국은행 보도자료 (자금순환)

③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IV-3-③)

□ 추진배경

- 창업(Start-up) → 성장(Scale-up) → 성숙(IPO 등)에 이르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 체계에 일부 공백이 존재
 -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후 후속투자*가 자금 공급주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

※ (Series A) 베타서비스, 시제품 출시단계 → 통상 20억원 수준
(Series B) 시장출시, 마케팅단계 → 통상 30억원~100억원 수준
(Series C~E) 시장점유율 확대, 해외진출 단계 →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 * 민간VC의 규모가 작고, 공적 VC는 개별기업 집중투자가 어려운 점 등
- * 성장단계별 투자금(초기/중기/후기, 억원) :
(한국) 13/18/21 (미국) 65/121/250 (중국) 64/176/960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창업) 혁신기업 출현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 ①혁신기업 창업보육을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 1」) 마련
 - ②클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및 자금조달한도 완화
 - ③금융투자업자에게 엑셀러레이터 겸업 허용
- (성장) 스케일업(Scale-up)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 ①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기능 강화
 - ②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③QIB채권 투자제약요인 해소,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플랫폼 구축
- (회수·재투자) 유니콘 기업 등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자들이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 ①K-OTC시장 매출규제 완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
 - ②IPO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및 시장자율성 제고
 - ③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BDC 도입 및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경로 신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20.3월~4월	
2/4분기	과제별(마포 「Front 1」, 클라우드펀딩, 증권사 IB기능 활성화, IPO 제도개선)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6월	
3/4분기	발표 과제별 후속조치 추진	'20.7~12월	
	K-OTC시장 매출규제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8~9월	
4/4분기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편방안 마련 및 거래소 규정 개정	'20.11~12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2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 등 투자자,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혁신·벤처기업 등
- (이해관계자) 투자기회 다변화로 투자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종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 증권의 발행인 등

☐ 기대효과

- 혁신·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단계별 필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증권공모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실적 (단위 : 조원)	154. 4	169. 8	175. 5	165.0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주식, 회사채 시장 침체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 기업자금조달 실적 목표치를 직전 3년간 평균수준으로 설정	국내 기업의 주식, 회사채, 신주모집을 통한 자금조달실적 합계	금감원 보도자료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 매주 부위원장 주재 정책조정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금융 정책의 이행과 홍보 상황 등을 점검
-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사실상 자체평가위원회 성격을 지닌 금융발전심의회 (이하, 금발심) 와 연계하여 운영
 - 분기별 정례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①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매주)

- 부위원장 주재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금융위 주요정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추진을 독려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국장급 이상 소관부가 참석하여 성과관리 과제 및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각 실국의 주요 정책 진행상황과 개선방안을 논의
- 특히, 주간 홍보계획과 언론 동향 등은 필수 안건으로 포함하여 국정과제 등의 홍보 전략 및 언론 반응 등을 모니터링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체계 효율화

- 금융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계, 금융업계, 법조계 등 각계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발심위원을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 제고

* 금발심-자평위 간 연계성 강화

(예: 자평위 회의를 금발심 분과회의로 같음하여 분기별 1회 이상(소위별)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략목표별 담당 소위원회로 구분 운영

- 총 4개 전략목표를 각 소위별로 1개씩 담당

* 1소위(전략목표 I), 2소위(전략목표 II), 3소위(전략목표 III), 4소위(전략목표 IV)

- 각 소위별 평가지원 T/F*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원 : 해당 전략목표 관련 성과관리과제 담당자

③ 연간 점검·평가 관련 세부실시계획

① 매주, 매분기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 정책조정회의(매주), 금발심 분과회의(매분기)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실적점검 및 정책컨설팅 기능 강화

② 하반기 중간점검 실시 ('20. 7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등 점검

③ 하반기 최종자체평가 실시 ('20. 12월~'21.1월) ※ 다음 페이지 [참고]

- 평가지원T/F를 통한 평가기초자료(실적보고서 등) 준비, 소위원회평가 및 최종평가회의까지 단계적인 평가체계 수립

※ [참고] 하반기 최종자체평가 단계별 세부계획

1단계 평가 기초자료 준비 (평가지원TF)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중심으로 평가의 기초자료를 (관리과제의 추진방향 및 분기별 추진실적 등) 분기별로 준비
- 분기별로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자체평가 계획」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최종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① 세부추진계획의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② 분기별 계획 이행도, ③ 성과지표 달성도, ④ 정책 효과성(정성적 평가)

2단계 검토 및 1차평가 (소위원회)

- 최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소관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 소위별 우수 과제 선정 (1~4소위 각각 1개)

3단계 평가점수 등 최종 확정 (최종평가회의)

- ❶ 소위별 1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에서 1차평가 시 선정한 우수 과제에 대한 2차 평가 시행
- ⇒ 4명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1~4위 과제 선정

- ❷ 소위별 1차 평가점수의 평균 차이를 보정*하여 5위 이하 과제 최종 점수 및 순위 결정

* 전체과제 평균점수와 소위별 평균점수의 차이를 소위별로 과제에 가감

- ❸ 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및 우수과제(1~4위) 포상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평가결과는 조직, 인사·성과급 지급, 직원 교육 등에 반영
- ◆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

□ 조직

- 성과평가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부서별 업무량 등에 대한 정보(예: 업무량 대비 인원부족)를 내부 조직개편 등에 활용
 - 다만, 조직개편은 직제개편이 필요하므로 직제개편이 필요없는 내부 태스크포스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

□ 인사 및 성과급

- ① 개인 성과급 지급시 자체평가 결과 반영
 - 5급 이하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관련 유공사항을 가점(10점)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② 성과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등에도 연계·강화하는 방안 지속 강구
- ③ 우수과제 소관 부서 및 담당자에게 포상·국외출장·단기연수 등에서 배려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성과관리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화요거시금융포럼 등 자체교육 활용
- 담당 과제 및 금융제도·현안에 대해 직원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3. 변화관리 계획

(1) 변화관리 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 변화관리전략과 관리방향

-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및 인사의 연계 고리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
 - 업권별 금융전문가 인재DB를 구축·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금융 포럼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세부실천과제

① 성과관리와 업무의 연계성 강화

- (교육 강화) 상시학습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를 확산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피드백 실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에 반영

② 금융정보 관련 웹페이지* 개선

- (사용자 환경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시스템 만족도 제고
- (피드백 실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

③ 학습체계 내실화를 통한 업무 역량 증진

- (학습프로그램 다양화) 브라운 백 미팅,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 (학습 유인체계 구축)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기반 조성

(2) 성과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 성과지표 관리전담팀 운영

-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을 성과지표 관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전체 성과지표들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총괄
- 성과지표 POOL* 지속 관리 및 활용도 제고
 - * (구성) ① '12~16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이용지표
 - ② 주요 국제기구 REPORT상 금융관련 지표
 - ③ e-나라지표(통계청)상 금융분야 지표
 - 등을 포함하여 300개 성과지표 POOL 마련
 - * (활용)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배포
 - 성과관리 총괄담당자 교육자료 등
- 성과지표 수정·보완 관련 국조실과의 협의 시 총괄 역할 수행

□ 하반기 자체평가 성과측정시 평가기준 개선

- 지난 성과관리 시행계획·실적보고서, 최종평가결과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평가 점수부여 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
- 성과관리과제 추진계획의 난이도 및 구체성에 따른 점수 차별화, 불리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한 경우 가점 부여 등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 현장점검 프로세스 효율화 · 체계화

< 계획 수립시부터 수요자 의견 반영 >

① 현장 점검

- 각 금융회사의 건의과제 수 및 방문 희망일시 등을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사전조사하여 분기별 방문계획 수립

※ 건의과제 수가 적은 경우 다수 회사 동시 점검 → 점검 효율성 제고, 개별 회사가 업무부담 등을 고려, 희망일시 요청 → 점검 부담 완화

② 테마 점검

- 실무부서 의견 사전 반영하여 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 후 옴부즈만 및 금발심 결과 보고

< 과제 관리 철저 >

① 현장건의과제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A, Alert) 접수 후 2주일 이내 회신
- (B, Basic) 당초 현장점검 과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접수 후 1개월 이후에는 yellow, 2개월 이후에는 red로 전환하여 환기
- (C, Careful) 검토기간이 2개월을 경과할 경우 '추가검토'로 회신하고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6개월 연장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수용을 권장)

② 체계적인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 성과보고회, 패자부활전 등의 다양한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과제관리 프로세스 구축 검토

(2)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및 소통 강화

<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 >

① 금융규제 민원포털 개선

- '주제별 카테고리*',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을 도입하여 '금융 규제 민원포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영업·업무규제', 'IT보안' 등 카테고리별 메뉴 설정, '자주 묻는 질문' 코너 등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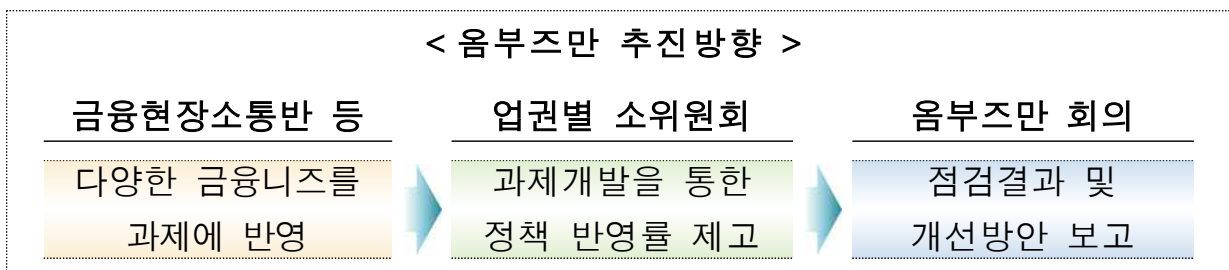
② ombudsman 제도 활성화

- (ombudsman 운영) 금융ombudsman* 위원을 위촉하여 금융규제 운영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건의·권고

*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금융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로 소비자중심 금융혁신의 자문역할

- ombudsman 직접 의견 개진, 이메일 접수, 업권별 소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접수·사전검토하여 분기별 본 회의에서 과제 심의

- (홍보 강화) 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상시홍보, 쌍방향 소통 강화



<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 >

① 메일링 서비스

-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규제개선 사항,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매월 송부*

* 해당 이메일 계정을 건의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통로로 운영

② 소통 채널 다양화

- ❶ (현장메신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인 등 현장메신저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

- 소비자단체, 청·장년·고령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연령으로 7개 그룹*(105명)을 구성하여 분기별 간담회 실시

* 소비자단체, 소비자패널, 법인대표, 금융회사 직원, 청년·대학생, 장년층, 고령층

- ❷ (소비자패널)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 ❸ (특정소비자) 장애인단체, 핀테크회사, 다문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실시

③ 금융정책 우수사례 국민 참여 투표

-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과제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총정리 하고,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이벤트로 추진

- 홈페이지, SNS 등 금융위 온라인 채널 이용자를 대상으로 'BEST 금융정책 우수사례' 선정 투표 및 결과 발표

- (디지털콘텐츠) 정책 담당자의 선정 소감, 우수사례의 주요내용 등을 이미지, 영상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추가 확산

- (정책반영) 투표 결과 및 제안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금융정책 수립에 반영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1 (25%)	0 (0%)	0 (0%)	3 (75%)	4 (100%)
성과목표	12	14	3 (21%)	3 (21%)	1 (8%)	7 (50%)	10 (71%)
관리과제	40	67	14 (21%)	14 (21%)	14 (21%)	25 (37%)	35 (53%)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①연도말 가계부채 잔액(증가율)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1,995.9조원 (4.0%)	정량	결과	
2.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금융업권 총자산 (조원)	24년말 금융업권 총자산 실적을 측정	6,420	정량	결과	
3.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①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조원)	'16년 사잇돌대출 출시이후 현재까지의 공급액 누계		정량	결과	
4.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①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비금융법인기업의 채무증권 부채+지분증권부채) / 비금융법인기업의 총부채	55%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전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증가율)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1,680.1조원 (5.0%)	정량	결과	
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점검조치	(1)EWS모니터링 실시 횟수 + (2)취약계열 및 부실징후기업 평가 횟수	15회	정량	과정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① 정책금융기관 혁신부문 자금 공급(조원)	각 정책금융기관 금융공급 실적 집계	31.0	정량	투입	
2.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40	정량	투입	
2.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신규금액(억원)	각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취급한 중금리 신규대출실적을 금감원을 통해 집계	7,000	정량	결과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금융기관검사및 제재규정」개정	감독규정 개정안의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여부	개정	정성	결과	
	②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대상과제 선정 정도(A)+ 과제내역서 공개 정도(B)*	100	정량	결과	
3.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서민금융 안전망을 개선한다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조원)	'20년 중 서민금융상품 공급액	7.0	정량	투입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감면율(%)	채무원금감면액 / 채무조정전 채무원금	33	정량	결과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 여부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정성	과정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보도자료 발표 여부	취 약 계 층 금융 소비자 지원 방안 마련	정성	과정	
4.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분야 공정경제 제도화 노력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회제출, 모범규준 개정·연장 여부,	·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국회제출 · 모범규준 개정·연장 · 지배구조법 개정	정성	결과	
		· 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제입법절차 진행여부 및 시행령 마련 여부				
2.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 불공정거래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9.1	정량	산출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국내 증권사 총 자산 규모 (조원)	· '20년 말 기준 증권사 총자산액	437.2	정량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차단	① DSR 점검(횟수)	분석 보고서	4회	정량	산출	
		②예대율 규제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개정	정성	결과	
	② 은행 자본규제 개선	①「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개정	정성	결과	
		③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①민간은행 유한책임대출 도입 목표치 부여	금융감독원 자료전송시스템	목표 도입	정성	투입
	②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공급액(누적)		주금공 업무통계(매월 집계)	11.0	정량	투입	
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①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공통)	개최 실적	관련 회의 10회	정량	산출	
		②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공통)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산출	12회	정량	산출	
		③거시건전성 분석 협의회 개최	개최 실적	4회	정량	산출	
	②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①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도입	행정지도 도입	도입	정성	결과	
		②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회의개최 및 규정개정	2회	정량	산출	
		③RRP 도입을 위한 금산법 개정안 발의	법률안 발의	도입	정성	과정	
	③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①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 실시 결과 및 취약계열, 기업 선정여부 확인	연3회	정량	산출	
		②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 방식 다양화	규모 확대 및 전용펀드 조성	확대 및 전문화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① 혁신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강화	①국가대표 혁신기업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및 관계기관 발표자료	지원체계 구축	정성	결과	
		②성장지원펀드 결성 금액(조원)	관계기관 등 제출 자료 합산	2.5	정량	투입	
	②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①소부장 전용 펀드 조성(조원)	펀드 조성액	0.4	정량	투입	
		②주력산업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	회사채발행지원금액	1.5	정량	투입	
	③ 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①상거래신용지수 연계보증	금융위 및 관계기관 발표자료	도입	정성	결과	
		② 동산담보회수지원	금융위 및 관계기관 발표자료	도입	정성	결과	
	④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	①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조원)	금융위 및 관계기관발표 자료	66	정량	투입	
		②금융시장 안정 지원(조원)	금융위 및 관계기관발표 자료	73.5	정량	투입	
		③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조원)	금융위 및 관계기관발표 자료	40.0	정량	투입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①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부스 개수	부스 개수	75	정량	산출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①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합산	40	정량	산출	
	③ 데이터경제 활성화	①신규 데이터 산업에 허가 받은 기관 수	허가 받은 사업자 수	5	정량	결과	
	④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고도화	①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 마련	방안 발표	방안 마련	정성	과정	
2.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①보험업경쟁도 평가	보험업 경쟁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경쟁도평가 발표	정성	산출	
	②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	①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여부	보도자료 배포	정성	결과	
	③ 신탁제도 전면 개편	①신탁업 전면개편	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	정성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①「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개정	감독규정 개정안의 금융위원회 의결 및 공고여부	규정 개정	정성	결과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확대	①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 및 공개 정도	대상과제 선정 정도(A)+과제내역서 공개 정도(B)	100	정량	결과	
	③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	①법령 규제정비 건수	입증책임위원회 법령검토 실적	1,113	정량	산출	
Ⅲ.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서민금융 안전망을 개선한다							
	①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공급확대	①금융회사 서민금융재원 출연액	누적 출연액 합계	6,000	정량	투입	
		②근로자햇살론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의 평균점수를 베타분포로 계산	80.1	정량	결과	
	② 수요자 중심 정책서민금융 체계강화	①휴면금융자산 원권리자 찾아주기 실적 (억원)	원권리자가 찾아가는 금액(휴면예금, 휴면보험금)	1,800	정량	결과	
	③ 채무자 중심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①소비자신용법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정성	과정	
	④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지원	①미소금융 전통시장 특별자금 공급액 (억원)	공급액 합계	100	정량	투입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마련	입법 예고	'금융 소비자 보호법 하위 규정 마련	정성	과정	
	②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①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종합 개선방안 발표	종합 방안 마련	정성	과정	
		②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개선 방안 발표	개선방안 마련	정성	과정	
	③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	①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발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개선 방안 마련	정성	과정	
		②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규정제정 실적	규정 제정	정성	결과	
④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억원)	①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들의 지원금 합산	4,275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①사잇돌대출 누적 공급액 (조원)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실적 합산	7.28	정량	투입	
	② 코로나19 극복위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①소상공인 자영업자 자금공급 (조원)	기업은행 제출 자료	16.0	정량	투입	
	③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①독거노인 찾아가는 휴면예금 안내	안내 실적 (횟수)	4	정량	산출	
		②장애인 ATM 보급 노력(%)	전체 ATM 중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ATM 보급 비율	90	정량	결과	
	④ 무주택·실수요 차주 주거부담 경감	①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확대(조원)	'20년 중 청년전월세 프로그램 실행액	1.5	정량	산출	
		②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출시여부	상품출시	정성	산출	
		③보증자리론 지원체계개선	주금공 내규개정여부	지원체계 개선	정성	결과	
		④캠코의 주담대 연체차주 지원프로그램도입	캠코를 통한 프로그램 출시여부	상품도입	정성	산출	
		⑤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60세→55세)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정성	결과	
		⑥주택연금 관련 제도개선사항(법개정)	법안 제출 여부	법개정 추진	정성	과정	
		⑦주택연금 연간지급액(조원)	주금공 공급실적	1.1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Ⅳ.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①금융그룹감독 체계 정비 추진정도	· 감독체계정비 의견수렴 - 전문가 세미나 등(10점) - 감독기관 협의체(10점) · 하위법규 제정 관련 - 시행령안 보완(10점) - 감독규정안 보완(10점) · 국제적 규범과 비교를 통한 금융그룹 자본적 정성 관련 연구용역 (10점)	50점	정량	과정	
		②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운영의 충실도	· 모범규준 운영 관련 - 감독대상 재지정 (10점) - 자본 적정성 평가(10점) - 위험관리실태평가(10점) · 금융그룹 의견수렴 및 교육 - 금융그룹 CEO간담회 및 금융그룹감독 실무TF(10점) - 교육 세미나 개최 (10점)	50점	정량	과정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①금융회사지배 구조법 개정	• 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재입법절차 진행여부* 및 시행령(안) 마련 여부 * 국회제출→상임위 소위통과 →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 법사위 소위 통과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통과 • 내규개정 사례 및 핸드북 등 공식참고자료(내부 참고 제외) 마련여부	지배구조법 개정 및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내규개정 유도 및 참고자료 배포		정성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	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완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완료/ 시행	정성	결과		
		②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발표	대책 발표	정성	과정		
	②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	①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 완료	연구 용역 추진	정성	결과		
		②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법 개정 추진	정성	결과		
		③불공정거래조사 시스템 기능 개선	조사시스템 연계 등 조사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 효율화 달성	기능개선	정성	결과		
	③ 대부업 감독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①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 발표	정성	과정		
		②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실적(만 건)	금감원 모니터링에 따른 적발건	1.4	정량	결과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량강화	①종합금융투자회 사의 모험자본 공급규모(조원)	중투사 공급규모 통계	1.20	정량	결과	
②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		①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 통계 측정	3,793.1	정량	결과		
③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①증권공모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실적(조원)	국내 기업의 주식, 회사채 신주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실적 합계	165.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①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차단	업무 1-가, 국정 21-1
	② 은행 자본규제 개선	업무 1-가
	③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국정 21-6
2.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업무 7-가
	②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업무 7-다
	③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업무 7-라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① 혁신부문에 대한 금융공급 강화	업무 1-라
	②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 1-라, 비상경제대책회의
	③ 금융회사 여신시스템 개선	업무 1-나
	④ 코로나19 대응 기업자금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
II.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업무 3-나, 국정 22-5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 3-나, 국정 22-5
	③ 데이터경제 활성화	업무 3-나, 국정 22-5
	④ 디지털 금융시장·인프라 고도화	업무 3-나, 국정 22-5
2.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업무 3-가, 국정 22-1
	②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	업무 3-가
	③ 신탁제도 전면 개편	업무 3-가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①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업무 1-마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확대	국정 22-3
	③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	규제혁신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Ⅲ.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1. 서민금융 안전망을 개선한다.		
	①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및 공급 확대	업무 4-가, 국정 29-3
	②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강화	업무 4-나, 국정 29-2
	③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업무 4-다, 국정 21-3
	④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4차) 등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업무 5-가, 국정 21-5, 22-1
	②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업무 5-나
	③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	업무 5-다
	④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업무 8-라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국정 29-4
	② 코로나19 극복위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비상경제대책회의
	③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업무 6-나,다
	④ 무주택·실수요 차주 주거부담 경감	업무 6-라
Ⅳ.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① 금융그룹감독 제도 도입	업무 8-나, 국정 24-4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국정 22-4
2.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①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	업무 8-가
	②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	업무 8-나, 국정 23-4
	③ 대부업 감독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업무 8-다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량강화	업무 2-가
	②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	업무 2-나
	③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업무 2-다, 국정 29-1